

제429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7일(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외교부 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재외동포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국제교류기금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 외교부 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재외동포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 국제교류기금

(10시09분 개의)

○소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전에 소위원회 위원 개선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서 김상욱 위원님이 기존 법안소위 위원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차지호 위원님은 기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일정은 오늘 오전에 재외동포청 및 민주평통 소관, 오후에 외교부 소관으로 진행하고 내일은 통일부 소관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 방법은 배부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서면질의로 지적하신 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소위 심사자료 각 항목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감액 및 증액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심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외교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다. 재외동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제교류기금

(10시11분)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외동포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외교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국제교류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소위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몇몇 항목들을 묶어서 설명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외동포청 소관으로는 감액 의견이나 부대의견 등 제안 없이 증액 의견만 13건 제시되었습니다. 한 세 번 정도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1번,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글학교 역량강화에 교사 수당 현실화 및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3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쪽 2번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사업에 3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에 재외동포 초청 인원 확대를 위해 32억 9400만 원 증액, 재외동포 교육사업에 미반영된 운영비 및 사업 홍보비 등 29억 10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재외동포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해 신규로 6억 6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쪽의 3번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은 동포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10억 원 증액 의견이고,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5건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18억 원 증액, 세계한인회장대회 10억 원 증액……

5쪽입니다.

동포단체 활성화에 차세대 동포 청년을 국내 기업에 매칭하는 활동 등 10억 원 증액,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에 시드니 한인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9억 5000만 원 증액, 동포단체 활성화 중 중국 차세대 동포의 온라인 교육 및 모국 초청연수 활동 지원을 위한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외동포청의 13개 사업에 대해 감액 없이 전폭적인 증액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모두 수용하는 입장이며 아울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제안해 주신 사업들은 재외동포청이 동포정책의 총괄 부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며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국내 귀환 동포 지원, 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재외동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사적 특수 동포 지원 등은 동포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시드니 소재 한인 회관 건립 지원 등 우리 청이 미처 살피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히 검토하시고 예산 증액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만 시드니 한인 문화회관 사업은 중요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 사업을 명시하기보다 한인 회관 사업 전반에 대한 일반적 증액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 주시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증액 사업을 다 합치면 이게 얼마나 돼요?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총 3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300억이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소위원장 김영배 나중에 가면 이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되겠느냐는 의견이—예결위에 가면 더 그렇거든요—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미니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상은 최소한 확보가 돼야 이 사업은 증액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그 정도의 의견은 지금 제출을 해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가 끝나기 전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단 넘어가더라도 그것을 다시 좀 검토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소위원장 김영배 의견 주십시오.

김건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동포청 예산이 올해 한 2% 증액된 거지요, 전체 예산이?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총액수가 1000억이 좀 넘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김건 위원 1090억, 사실 동포청이 새로 생겨 가지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증액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삼백 몇 십억이 마구잡이로 증액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일단 다 듣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보고를 계속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러면 이어서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 재외동포 소통플랫폼 구축 사업에 양질의 모국 관련 콘텐츠 제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 규모는 26억 6600만 원 또는 20억 1600만 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사업 중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에 27억 3100만 원, 사할린 동포지원에 5억 5000만 원, 해외위난동포 지원에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8쪽 7번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동결된 특별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35억 4300만 원 또는 29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8번, 재외동포 글로벌 서비스 강화 사업은 증가하는 순회영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외동포영사서비스지원 내역사업에 증액 의견이 10억 7900만 원과 9억 4000만 원 규모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9쪽 9번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사업 중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내역사업에 34억 1500만 원 또는 29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거점형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신규로 실시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끝까지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10쪽의 10번,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사업의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 사업은 구 재외동포재단 시절 지원액을 원복하고 대안학교 지원 등을 위해 10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11번 인건비에 대해서 증원이 예상되는 인력 4명에 대한 3억 1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12번, 공보·홍보 역량강화 사업의 내역사업 기획홍보는 온라인 홍보 및 광고 등을 확대하기 위해 10억 2900만 원 증액, 공보서비스강화는 적극적인 공보 활동 전개를 위해 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신규 내역사업 재외동포 DB 정보화 전략계획을 도입, ISP를 수립하기 위한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면, 아까 다 포괄적으로 동의한다, 거기에?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일단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우선은 지난번에 한정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10번의 경우 대안학교 지원을 이렇게 재외동포청에서 따로 추가로 하려는 게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그 부분은 저희가 대안학교를 지원한다기보다는 공교육,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서 정규수업을 듣는데 동포들이 한국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수업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내국인의 경우에는 과외 수업 또는 학원 이런 걸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안학교라는 장소에서 방과후수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자체를 지원한다기보다는 대안학교라는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하는 방과후수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기존에 몇 군데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어떻게 늘리는 거지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기존에 저희 사업에는 없었고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저희가 예산이 증액된다면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 동포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들이 한 아홉 군데 있는데 그중의 4개 학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방과후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해서 저희가 그 수요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 동포들 대상으로 방과후수업을 별도로 모아서 한다 이거네요, 거점형으로?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그렇습니다. 특히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서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 갔을 때 그 수업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초등, 중등, 고등 중에 주로 초등 쪽인가요? 어떤 쪽이지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이것은 초중고 다 해당됩니다.

○윤후덕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얘기만……

○소위원장 김영배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후덕 위원 8페이지의 7번 사할린한인 영주귀국한 분들 중에 일부가 우리 파주에서 정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 때 뵈고 그러면 생활하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보살피다가 동포청으로 이관이 된 거지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번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내년부터 이관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그게 한 10년 전서부터 동결돼 있는 모양이에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반영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기재부하고 협의는 안 했어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이것은 정부안 편성 단계에 있어서 원래 저희가 가지

고 있던 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증액 자체보다는 이관·이체하는 과정에서 그것만 협의가 되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좀 잘 보살펴 주시고요 이 생계비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고 청도 그렇고.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지금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 이상 예산 동결이 됐다는 그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서 작년부터 영주귀국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모든 자녀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한국에 온다고 하면 지원해야 될 대상은 늘어나는데 저희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다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증액이니까 이것 증액에서 삭감을 해요? 심사하기가 참 힘드네요.

○**소위원장 김영배** 사실상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예산심사라고 볼 수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식 위원** 재외동포청이 일단 재단에서 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여러 새로운 예산 수요가 필요함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청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거나 또는 청이라는 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여러 예산 항목들이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종합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께서. 재외동포청에서도 의견을 다시 한번 주셔서……

지금 사업이 전체 13개입니다, 즉 세 보니까. 13개 사업에 항목으로 치자면 27개 항목 이에요. 그래서 약간 산만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액이 돼야 될 것이므로 이 전체 27개 항목 사업의 꼭 필요한 적정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더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다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데서는 저는 여야 위원님들이 공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원장 김영배** 예를 들어서 맨 뒤에 보면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공보 강화 이런 부분은 인프라로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앞에도 보면 김건 위원님이 제시한 재외동포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이런 류의 시스템을 장차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려서, 예를 들면 청소년 초청하는 숫자를 늘린다든지 지원하는 액수를 늘려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단가가 올라가는 거나 숫자가 늘어나는 문제는 그중에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 그다음에 중요성 이런 걸 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증액 의견을 냈다는 것은 재외동포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예결위에 갔을 때 예산이 갑자기 1000억짜리가 1300억이 넘게 돼 가지고 오면 이건 왜 예산심사를 하나도 안 했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그러면 일단 심사는 오늘 오후에 시작하면서 바로 이것부터 검토를 좀 할 테니까, 외

교부 하기 전에 잠깐 검토를 하고 시작할 테니까 그 전까지 이것을 새로 점검을 해 가지고 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소위원장 김영배 안철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안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철수 위원 여기 보면 IT 분야가 3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의 재외동포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이 나오고—이건 신규고요—그다음에 5번의 재외동포 소통플랫폼 구축이 나오는데 이건 작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13번 재외동포 DB 정보화전략계획인데요 이건 신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IT 시스템 쪽은 무조건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올해 내로 충분하게 기능을 확충하거나 스케일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게 IT 쪽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학생들 몇 명 더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계량화할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 부분은 비용만 늘려 놓고 오히려 낭비의 요소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도를 못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저는 5번 사업 같은 경우 재외동포 소통플랫폼 구축을 작년부터 해 왔다고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시스템 구축 비용은 안 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포청에서 이렇게 감액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올린다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고 작년 수준을 유지한다면 사실 감액이 맞는 거지요, 작년에 시스템 구축은 됐으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혹시 주실 말씀 계신 분?

그런 상황 감안해서 나중에……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그러면 나중에……

○소위원장 김영배 뭐 말씀하실 것……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저희 재외동포청 예산이 25년도 올해 1071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1092억 원으로 정부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표면상으로는 21억 증가한 것으로 돼 있지만 복지부에서 이체된 사할린동포 관련 예산 78억을 고려할 경우에는 사실상 57억 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안 전체로 보면 3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반영된다고 할지라도 한 240억~25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철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재외동포 소통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 추진을 시작해 가지고요, 10월 28일부터 26년 4월까지 소통플랫폼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계약이 되어 있는데 4월 이후로는 저희들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정부 예산안 3억 3400만 원으로 추진을 해야 돼서 중도에 사업이 중단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신청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안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사업 중에 마지막 재외동포 DB 구축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외동포 정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DB가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재외동포재단 시절에 스터디코리아, 한상넷, 코리아넷 이런 것들을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20년

이상 노후화되고 이 시스템은 부품 교환도 잘 안 되고 해서 저희가 통합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어떤 예산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예결위까지 통과돼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13번?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안철수 위원 그런데 또 생각해 보아야 될 점들이 있는 것이 새롭게 DB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아마 새롭게 DB 시스템을 디자인,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의 계획을 다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DB 같으면 오히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1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인가, 오히려 2년을 두고 완벽하게 해 놓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낫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제 판단으로는 이게 1년 만에 끝날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이것은 지금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본사업이 아니고. 정보화 사업 할 때는 ISP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본 사업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3.5억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사업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규모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 봐도 써 있는 것하고 내용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지금 얘기하는 건 설득력 있는데 써 있는 것은 안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늘려야 되겠는데 그런 설득력이 좀 부족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다 말씀하시고 그랬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외통위 수석실에서도 같이 내용을 정리하고 액수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오후에 보고하면 그때 검토해서 결정을 하시도록……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앞으로 한 1시간 반 이상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 가지고, 수석실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뵈게요.

재외동포청 했으니까 그다음에 민주평통……

들어오시는 대로 시작하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민주평통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박학민 민주평통사무처장 출석하셨습니다.

심사 방식은 아까 재외동포청하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사우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자문회의 운영에서 협의회장 직무수행경비 내역사업 신규 편성을 위하여 6억 5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2번,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세부 사업에서 전용 교육·회의 청사 마련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횟수 확대를 위해 2000만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3번, 자문위원 역량강화 세부사업에서 국내 청년위원 역량 강화 기획사업 확대를 위한 3억 2000만 원 그리고 청년 평화·통일 글로벌 페스티벌 신규 추진을 위한 9억 3800만 원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추진하는 안으로 12억 5800만 원 증액 의견과 그중에 국내 청년위원 역량 강화 기획사업 확대만을 위한 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4번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관련해서 해외 모든 협의회에서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국외출장 예산 확보를 위해 1억 9100만 원 증액 의견과 국정과제인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을 위해 시군구 단위 생활권 지역까지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 16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무처로서는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5개 증액 사업 모두 저희 평통이 앞으로 성과 있는 사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성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1번 자문회의 운영 관련해서 협의회장 직무수행경비를 처음 지급하게 되는 거란 거지요, 이제까지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사실은 명예직이었지 않습니까, 평통 협의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저희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발을 내딛는 게 사실 이때까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여서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이것을 월 20만 원이라고 그러면 사실 택도 없는 건데, 이게 이 발을 디디면 월 20만 원이 안 될 가능성이 커서 매년 예산 증액 압박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거의 어떤 순수성을 지키는 거하고 이렇게 첫 발을 내딛으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하고 조금 결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예, 간단히 해 주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수라는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보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님들이나 다른 분과위원장들 그 주요 보직을 가지

고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직책수행경비를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협의회장님들께서는 각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각종 회의를 주재하거나 사업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거의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어서, 개인 사재를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한 그런 어쨌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 드리면 더욱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최소한의 의미에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또 의견 주십시오.

저는 3번에요 행사가 이게 청년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것은 글썽, 이게 평통 출범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별도 행사로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저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대화도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회적 대화를 그동안 안 해 온 것은 아닌데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통일부하고도 약간 겹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을까 그게 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통이, 특히 평통 위원들이면 아무래도, 해외에 계신 분들 같으면 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경쟁도 있고 굉장히 명예스러운 자리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역 현지에서의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국내에 모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2년에 한 번이지요. 없는 게 아니고 출범식 할 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임기가 긴 것도 아니고 2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런 예산보다는 지역에서 활동을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게 목적에도 맞고 사업계획으로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청년위원들이 기존의 장년층과의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함께 모이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임기 한 번 정도는 청년위원들만 모여서 전체를 한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페스티벌 기획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유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자문위원회의에 활동하시는 지역협의회장의 월 20만 원 이런 내역사업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본예산 편성할 때 이 편성을 했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허예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증액을 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은 되지는 않았고 증액을 추진했었으나 되지는 않았습니다.

○윤후덕 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 내역사업은 꼭 해야 한단다고 하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계속했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허예원 예, 저희가 기재부랑은 협의는 지속해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구조조정이나 이런 예산 절감이 계속돼 오다 보니

까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이 내역사업을 만들어서 요구를 했던 사실이 있냐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허예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 요구안을 낼 때는 하지는 않았고 예산 요구안을 낸 뒤에 기재부 내에서 증액심의 과정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국회 들어와서 증액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허예원** 그런데 사실 정부안에서 추진을 하기는, 증액 추진 심의에는 넣었기 때문에 꼭 국회에서만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재부와도 협의는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정식 위원** 기재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국회에서 기재부가 완강히 반대하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기재부가 부처 협의를 잘 안 되면 그럴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기재부를 설득 좀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허예원** 기재부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증액을 요청했지만 반영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또 기재부에서 좀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완강히 반대한다기보다는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걸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협의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있지만 기존에 부의장이나 분과위원장 그리고 분과위원회 간사 이런 분들은 3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장님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큰 반대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저도 성북구청장을 하면서 평통을 잘 압니다. 같이…… 다 마찬가지로 실 텐데요.

그런데 이게 20만 원이라고 하는 활동비를 지급하면 오히려 활동을 제대로 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통·반장님들 수당 이런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통·반장님들은 실제 대리해서 정부의 일을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자문기구란 말이에요.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포함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자기가 대표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알려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문회의니까 대통령한테 자문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꼭 필요하지 않은 보조를 받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취지를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안 하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3번도 제가 정리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김영배, 조정식 두 사람이 낸 의견으로 이 의견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 대화 영역도 조금 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저는 조금……

○**이춘석 위원** 제가 한마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협의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직무수행경비가 없는데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다른 직책들, 분과위원장이라든가 뭐 한다고 하는데 그 분과위원장은 지역협의회 분과위원장이냐 이런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아닙니다. 지역회 단위는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운영위원 그분들, 중앙 단위의……

○**이춘석 위원** 중앙 단위의 그 직책을 맡고 있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의 경비 지출이 드는데 지역협의회는 안 된다? 그러면 지역 경비는 회장뿐만 아니라 모든 직책에 대해서 다 안 줘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지금 지역 부의장님들은 운영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소정의 직책수행경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니까 지역 부의장이라는 것은 도 단위 광역단체장 그런 게 이 기초단체장 협의회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게 최초로 지금 협의회장들도 일을 하니까 좀 지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게 민주평통 사무처의 생각인 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안철수 위원** 저도 김영배 소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민주평통 협의회장이라는 게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아까 김건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일이어서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 그리고 저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수를 받게 되면 아마 이분들한테 개인 경비가 더 나갈 수도 있지 않나, 이 정도 액수로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계속 무보수 명예직으로 남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리고 아까 이춘석 위원님 질의 중에, 물론 아까 답변 중에 시도 부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도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상당히 상근에 가깝게 일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물론 지역의 평통회장들도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만 저는 이 금액 2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성격상 지역에서 명예를 조금 더 높여 주는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경비도 있고……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규모가 커지면서 오히려 증액 부분이 조금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실제 증액이 굉장히 뽀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이게 까딱 잘못하면 다른 꼭 필요한 것을 못하고 이게 심사를 대강 해 놓으면 나중에 엉뚱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정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평통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혹시 추가 의견 없으시면 1번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3번은 맨 밑에 있는 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4번은 위의 것은 확보를 하고 이 사회적 대화 부분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원래 34개 지역에서 100개로 늘리려고 한다는 건데, 34개 지역만 하게 된 이유가 뭐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저희들이 17개 시도, 국내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지역 회의별로 한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34회를 잡아 놨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이게 34개 지역으로 처음 하는 건가요, 올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올해는 이제……

○**소위원장 김영배** 작년에도 했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기존에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 원탁회의라고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년에 3회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기회가 적다 보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별로 최소한 한 2회 정도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34회……

○**소위원장 김영배** 작년까지는 3회를 한 건데 올해 34회로 기획을 했던 것을, 정부 차원에서 34회만 돼 있는데 국회에서 100회로 늘려 달라 이런 이야기인 거네.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원래는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의 당시에 100회를 기준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회가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최소한 시도에서 한 서른네 번 정도, 시도당 두 번 정도는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34회로 정부안이 조정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이 사업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 예산에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2개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 여기에 이것을 증액한다고 그러면 통일부 사업은 좀 깎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이게 통일부도 똑같은 사업이 있던데……

○**이재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자에 통일에 대한 논의가 너무 터부시돼 왔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통일부라는 부처에 의해서 기획되는 사업과 풀뿌리로 이미 마련되어져 있는 평통을 통한 사업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을 중복되는 지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런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고요.

마찬가지로 청년 페스티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역의 현황은 그렇습니다. 돈 깨나 있는 분들, 지역에서 힘 좀 쓰시는 분들이 조직 안에 꼭 들어와 계신데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하시는지를 쳐다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로 함께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는 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평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론을 수렴해서 대통령께 진정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가에 대해서, 그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늘 고민이 있고 그 안에 청년위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위원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역 사업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 간에 공통의 고민들이 공유되는 그런 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페스티벌의 내용이 거기에 충분히 충실한 행사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금 더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는 의견을 드

리는 바이지만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저는 좀 공감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조정하면……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식 위원 방금 전에 이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2쪽의 연번 3번 자문위원 역량 강화 보면 청년·여성위원 역량 지원을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청년 기획사업을 5개 권역에서 18개 시도로 확대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평화·통일 글로벌 페스티벌 사업을 신설했는데 이게 9억 3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하나 좀 물어볼게요. 이 사업에, 글로벌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전 세계 다 해서 같이 붐을 일으키자는 건데 여기에 해외에서 오는 청년·여성위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70명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역을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허예원 예, 그 정도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며칠 동안 합니까? 하루 하는 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당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러니까 하루 하는데 일회성 행사로 거기에 약 9억 4000만 원, 10억 가까운 돈을 한다는 것은……

○소위원장 김영배 전 세계에서 오니까.

○조정식 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약간 과하고 논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 취지에 걸맞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 참가자…… 국내 참가자들은 그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괜찮은데 해외 참가자들은 이번 기회에 전 세계 70명을 대상으로 한 번 초청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살리면서 이 페스티벌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재설계하는 게 필요하지 이것을 일회성 페스티벌로 해서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투입한다, 저는 이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취지는 잘 살리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폭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 놓고서……

이게 첫 사업,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맞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것을, 소위 말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목을 보니까 기획사에서 뽑아 온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게 일반용역비가 지금 여기 기획 운영, 무대 장비, 세션 토론, 문화 프로그램 해 가지고 7억 3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 만에 그냥 짝 하겠다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취지를 살리면서 최소한 간소화하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초청을 하고—그에 대한 필요 경비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니까—그렇게 하면서 재설계를 해 보고 그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다시 한번 할 때는 좀 더 이것을 발전적으로 살리면 좋겠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더 알차게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이것을 한번 그렇게 해 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국내 청년위원들은 따로 한번 하고, 국외에 있는 청년위원들은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출범식을 할 때 오잖아요. 그때 별도로 청년 대회를 조금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일정하게 국내에서 하는 행사에 맞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정도 반영을 일단 반영해 놓고, 청년들은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출범식 이후에 별도 프로그램을 조금 추가로 그때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해 보고…… 그렇게 되면 해외 초청 비용은 없어지잖아요, 국내 행사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때요, 평통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말씀 주신 그런 의견들은 저희들이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말씀해 주신 그 취지를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액수를,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 9억 3000 정도를 3억 정도 이렇게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 말이에요. 합해서 6억, 그렇지요? 그렇게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알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사회적 대화 이것도 이재정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7 곱하기 2가 34개잖아요. 17 곱하기 3은 51개 아니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51개로 조정하지요, 그러면. 이왕 34개로 해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일단 한 번씩 정도 더 늘려서 51개로 일단 해서, 아까 통일부하고 조정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늘려 놓으면 나중에 통일부 것을 깎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여기는 해 주고 왜 통일부 것은 안 해 주냐고 통일부장관님이 그러실 건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할 것 같으니까 일단 곱하기 3 해서 1회씩 늘리는 것으로 일단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건 위원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평통이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하라고 만든 기구니까 이 업무는 이쪽에 더 몰아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조직이 다 돼 있고 거기에 수천 명의 구성원이 돼 있고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하게 딱 만든 기관인데, 그래서 차라리 이쪽에 그것을 특화시키고 통일부가 그 콘텐츠를 줌……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통일부 것은 아직 우리가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그것을 깎자고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김건 위원 그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방향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재정 위원 지금 통일부 예산 심사 시기도 아니고……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이재정 위원 통일부 예산 항목을 보지도 못했지만 저 역시 의견을 조금만 보태면 실제 지난 사회적 대화 내용들, 통일부 사업들을 떠올렸을 때 분명히 평통 조직하고는 다

립니다.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를 아울러 가지고 양적 평등, 그다음에 질적으로도 참여도의 평등을 해서 균형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합의해 나가는 과정들을 만드는 그런 식의 사회적 대화고, 지금 평통이라고 지역별로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신청에 의해서 어떤 구성이 될지 모르는 그런 조직들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 나름의 의미와는 별도로 기획되는, 또 그 목적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은 아니지 않나. 그래도 제가 의견은 넣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위원님들, 제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조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 보세요.

○전문위원 김사우 2번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언급이 없으셨는데 증액을 하실 것인지……

○소위원장 김영배 예, 이것은 증액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김사우 그리고 3번 관련해 가지고 합쳐서 6억을 증액하실 것인지……

○소위원장 김영배 예, 6억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청년위원 역량 강화 기획사업이 2000만 원 감액이 돼 버리는 꼴이 되는……

○소위원장 김영배 아닙니다. 3억 3억 하면 돼요. 충분할 거예요.

○전문위원 김사우 3억 3억……

○소위원장 김영배 내역 조정하면 되니까 3억 3억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사우 예.

○조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민주평통에서 3번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묶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서 여기 해외 청년들이 와서 국내 청년들과 같이 한번 또…… 막 페스티벌 식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네요.

○조정식 위원 그것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합리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안을 한번 좀 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한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은 내역사업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 오는 게 좋을지, 재설계를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빨리 한번 안을 내보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이것도 나머지는 다 아까 제가 조정한 대로 하고 이 항목만 6억 정도 근처에서,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출범식 때 오면 같은 거 같아요. 시기적으로 같이 붙여서 할 수 있는지, 그렇지요? 아니면 국내 역량을 강화할 국내 위원들은 따로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좀 이따가 의견을 내주시면, 오후에

우리 시작하자마자 아까 재외동포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시지요.

○전문위원 김사우 소위원장님, 마지막으로 3페이지 상단 관련해 가지고는 1억 9100만원 반영하시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요. 마지막 하단에 16억 8000만 원을 하실지 아니면 51개……

○소위원장 김영배 51개로.

○전문위원 김사우 51개로, 그러면 4억 1820만 원을 증액하는 꼴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전문위원 김사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의결은 좀 이따가 오후에 시작하자마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후에는 1시 반에, 조금 일찍 종료가 되니까요 1시 반에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1시 반에 일단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재외동포청 예산과 그리고 민주평통 예산을 심의하다가 오후에 다루자고 그래서 넘겼는데 일단 재외동포청부터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보고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위원장님, 위원님들 좌석에 외통위 소위 조정안 자료를 깔아 뉘었습니다. 당초 13개 사업에 대해서 27개 항목에 339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중복된 것은 더 많은 증액으로 감안한 결과입니다.

이 중에서 4건은 전액 삭감하고 10건 정도를 증액 규모를 조정하는 선에서 오전에 위원님들 주신 말씀이랑 또 동포청의 어떤 정책적 우선순위나 시급성 감안해서 정리한 결과 최종 114억 원을 증액의견에서 감액해서 225억을 순증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의결을 좀 이따가 해야 되는데 일단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정리를 해 놓고 의결은 한꺼번에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제가 여쭙볼게요. 이것 증액되는 225억 중에 덩치가 제일 큰 게 어떤 예산이지요? 6번이지요, 아닌가요? 6번·7번.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한글학교 지원하는 1번 38억……

○소위원장 김영배 아, 1번 있구나.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런데 사실 이게 전체 원래 원안이 231억 규모이기 때문에 %로 했을 때는 오히려 말씀 주신 6번이나 이런 사안이 기존 안이 85억 수준이어서 증액 수준은 더 규모가 크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1번은 이게 지금 수당 현실화하고 학습환경 개선이라고 했잖아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학습환경 개선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저희가 한글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자발적으로 우리 동포들이 만들어서 주말에 주로 운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비의 한 30% 정도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는 동포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건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한 50%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리고 6번·7번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도 그전에 위원들도 지적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이것 상향시켜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윤후덕 위원 이 조정 내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규모나 항목별로 좀 의논을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청에서는 이 조정 내역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동의합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특별한 것 없으시면 이렇게, 일단 지금 의결은 한 분이 더 계셔야 의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조금만 잠시 대기하고 계십시오. 뒤에 그냥 좀 앉아 계세요, 금방 같이 할 거니까.

평통은 어떻게 돼 있지요?

○전문위원 김사우 전문위원 보고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영배 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사우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민주평통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정리하면 총 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2000만 원, 자문위원 역량강화 6억 원,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중 해외 통일정책 강연회 1억 9100만 원,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4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해서 모두 합해 4건—세부사업 기준은 3건입니다—에 걸쳐 12억 8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심사에서 우리 소위원회가 민주평통의 자문위원 역량강화 중 청년 평화·통일 글로벌 페스티벌 사업 추진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재설계 등을 요구함에 따라서 민주평통이 동 사업의 명칭·구성 및 추진 방식 등을 재설계하고 그 소요 예산을 산정한 결과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일정 금액이라는 게 6억 원보다 조금 더 확보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라는 말인가요?

○전문위원 김사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나머지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것 청년 부분은 6억보다 조금 더 해요? 얼마나 할까요? 요청 액수가 얼마예요?

○전문위원 김사우 민주평통 쪽에서 추가로 요청한 금액은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두 합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6억 7000이 아니고?

○전문위원 김사우 아니요, 글로벌 청년 평화·통일 회의 관련한 2억 8000에서 3억 5000으로.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국내 것과 합치면 총 얼마예요?

○전문위원 김사우 국내 것과 합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6억 70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6억 70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6억 7000. 그래요? 그러면 6억 7000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됐고, 가결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소관 사항하고 민주평통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그걸로 의결할 테니까요.

재외동포청도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전문위원 김사우 글로벌청년평화통일회의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 증액을 포함한 최종 결과는 4건, 세부사업 기준으로 3건에 걸쳐서 총 13억 5800만 원 증액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아까 정리한 것.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재외동포청 소관 사업은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38억 8000만 원 증액 등 총 22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

○강선우 위원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한마디만 조금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영배 예, 말씀하십시오.

○강선우 위원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재외동포청 예산 관련해서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예산이 증액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59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저는 재외동포 모국 초청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러 가지 사업 내역을 좀 봤는데 주제나 방향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해외에 나갔던, 소위 외화 벌이를 해 왔던 이런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 광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민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재외동포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그 예산을 배정하는 일도 필요하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외동포청에서 내년이 파독 60주년을 염두에 두시고 파독 간호사에 대한 모국 초청 등에 대해서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잘 감안해 주십시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부터 합니다.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감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평통, 잠깐만……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사무처장님의 전화가 왔었는데 평통은 우리 양당 간사한테 아까 이야기했던 청년들 관련된 사업계획을 더 디테일하게 보완해 가지고 가능하면 내일, 전체회의 의결 전에 주면 좋고 아니어도 예결위 제출하기 전에는 저희 양당 간사한테 꼭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검토를 맡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하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박윤주 외교부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앞의 재외동포청 등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식하고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자료 1쪽, 감액 의견이 7건 있는데요.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인도네시아(ODA) 사업은 3건의 사업이 2025년 8월 말까지 누적 공정률이 0%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75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번, 방글라데시(ODA) 사업 중 방글라데시 플랫폼 기반의 통계 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은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만큼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이유로 8억 원 감액 의견.

3번, 파키스탄(ODA) 사업 중 파키스탄 국립섬유대학 산업용 섬유센터 건립 사업 2차 사업은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안이 증액되어 16억 75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고.

다음 3쪽의 4번,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사업 중 피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도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만큼의 예산을 배정하는 이

유로 10억 감액 의견.

5번,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사업 중 과테말라 경찰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고등교육원 개선사업은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증액되어 13억 87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4쪽의 6번, 글로벌연수(ODA) 사업은 타 부처 소규모 연수 사업들을 이관하기 위해서 3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대상 개별 사업을 재기획하고 그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므로 10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 사업 중 연수센터 지원은 낮은 가동률과 외부 숙소 이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지적과 함께 12억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7번,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매년 예산 먼저 확보해 놓는 비정상적인 구조 및 일부 공관에서 공관장 차량으로 외국 기업의 차량을 구입하는 선례 등을 고려하여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액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외교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외교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 관련해서 저희는 총 7건에 대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감액 불수용 사유에 대해서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인도네시아 ODA 관련 3건 모두 사업 지연 사유 해소에 따른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서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정부 원안 유지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보건인력 관리체계 개선사업은 2026년 1월중 사업수행자 선정 완료 후 기자재 납품 등 후속 과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국가사무처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사업은 11월중 협의의사록 체결 완료 후 연내 사업수행자 선정 등 후속 과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자카르타 도시철도 지속가능성 향상 방안 구축 사업은 2026년 1분기 중 협의의사록을 체결하기 위해 문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2번, 방글라데시 ODA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연내 사업시행자 선정을 통한 정상 착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 원안 유지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방글라데시 플랫폼 기반의 통계 서비스 역량강화사업은 2025년 11월 시스템 개발사 및 2025년 12월 시스템 개발 감리 용역사 선정 후 2026년 과업을 정상 착수할 예정입니다.

3번, 파키스탄 ODA 관련해서는 동 사업은 수원국의 정세 불안으로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연내 사업시행자 선정을 통해 정상 추진 예정인 만큼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파키스탄 국립섬유대학 산업용 섬유센터 설립 2차 사업은 연내 시공사 및 기자재 공급업체 선정 후 2026년 섬유센터 정상 착공할 예정입니다.

4번,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이 다소 순연되었으나 책임 있는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기간 1년 연장 후 정상 착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피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역량강화사업은 2025년 12월 현재 설계 확정 및 입찰 준비 단계로 내년 상반기 중 태양광설비 착공 예정입니다.

5번,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관련입니다. 과테말라 경찰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고등교육원 개선사업은 연내 한국 경찰청과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내년 사업 본격 착수 예정인 만큼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6번, 글로벌연수 ODA 관련입니다. 부처 연수 지원은 각 정부 부처에서 연례적·선발적으로 개발 수행 중인 단기초청 연수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OICA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부처는 사업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여 KOICA의 표준화된 사업 절차 및 성과관리 시스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수센터지원은 국내 초청 연수생 우선 숙박, 연수 과정별 실시기간 분산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과 가동률 제고가 예상됩니다.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 관련 적극적인 보완을 통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7번,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관련입니다.

재외공관 차량 교체는 직원 안전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적기 교체를 통해 외교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해외 근무 환경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안 유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감액 의견을 낸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이게 사실 ODA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ODA 사업인데 공정률이 다 낮은 사업들이라 이걸 한번 이렇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항상 이렇게 예산 때 되면 와 가지고 이제 준비가 다 돼서 잘될 겁니다 하고 다음에 가 보면 또 안 돼 있고, 또 안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공정률 낮은 사업을 따로 다 모아서 한번 점검하는 걸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매년 지금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있고. 와 가지고는 대충 지금 이제 곧 될 겁니다 그러고 그다음 날 가 보면 또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이게 현실인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사실은 저도 국회운영위에서 지적을 하면서 위성락 실장한테 ODA 사업이 국가의 전략계획하고도 일종의 방향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부처 간에 찢어발겨서 이렇게 거버넌스도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는 정도 수준으로 프래그먼트드(fragmented) 돼 가지고 이게 괜찮겠냐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정책실장님한테는 ‘EDCF는 실장님 소관이지요?’, ‘예’. ‘무상은 다 안보실장님 소관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무상도 부처별로 다 나뉘어져 있어서 정책실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실장님은 다 아세요?’, ‘모릅니다’. ‘그러면 비서실장님은 내용 아세요?’, ‘모름

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통합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이게 괜찮냐, 그리고 글로벌 책임강국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 뒷받침하려면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선의를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선의를 실제로 실체화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이게 집행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건 간사님 말씀대로 꼭 이 사업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지적하려면 끝도 없잖아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고민입니다, 사실은.

참고로 조정식 위원님이 조금 이따 오실 건데 대통령 인도네시아 특사를 갔다 오신 분으로서, 아까 전화 와서 인도네시아에 본인이 가서 대통령하고 약속을 하신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 예산은 본인이 말씀 못 하시더라도 꼭 저한테 대신 말씀을 드려 달라라는 연락이 조금 전에 왔었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간사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유무상 또 통합 이런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무상통합 정도라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도 법안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역시도 개별 사안별로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기는 어렵고 근원적으로 어떤 구조 시스템을 만들면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중지를 모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심사를 하는 지금 상황에서 부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세 불안 때문에 되지 않았던 지점들의 정세 불안 해소 상황들을 충분히 우리로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협의의사록이 체결됐는지 그리고 바로 직전에 사업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든지 등의 사정에 있어서는 동의되는 바도 있기 때문에 근원적 고민을 여야가 같이 해 가는 것을 뒤로 미뤄서 저희가 또 해결해 가기로 하고 이 내용에 있어서는 외교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개별 사업이 꼭 문제가 돼서 감액이나 이게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일단 통과는 해주되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예산소위 입장에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정 위원님이 내놓으신 법안도 있고 해서 ODA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우리 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 같은 것을 날짜를 잡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정부하고 같이 공청회를 한번 하는 걸로 하고 또 한 번은 이게 사업 기획이 내년에 될 것 아니에요? 집행계획이 세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 점검으로 날을 정해서 5월이든 4월이든 올해 되고 있는 것 딱 한번 이때까지 문제된다는 걸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것도 회의를, 그걸 가지고 예산소위 차원에서 점검회의를 한번 준비를 하는 걸로 하고 그 준비를 외교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해서 범부처적으로도, 꼭 우리 외교부 예산만이 아니라 그때는 예산소위에 점검하는 회의가 아니니까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들도 가능하면 혹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그때 한번 같이 들여다보고 논의도 해 보고 하는, 그것 하기로 하고 이걸 일단 해 주고 하는 게 어떨까.

○**이재정 위원** 그렇지만 너무 디테일한 것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효율성의 문제로만 가면 외교 영역에 있어서는 효율성의 문제로만 다가가갈 수 없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ODA 설계에 있어서의 원칙이라든지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 그런 점검도 같이 어우러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ODA 이런 거는 여야가 진짜로 합의할 수 있는 일종의 국가 목표, 국정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ODA를 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원칙이나 이런 걸 사실은 몇 가지라도 합의를 해 놓을 수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심사할 때도 계속 그런 걸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논의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걸 전제로……

김건 위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드린 2개의 회의를 하기로 하고……

○김건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재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항부터 5항까지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시지요.

고맙습니다.

안철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안철수 위원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정말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ODA가 제일 문제가 분절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있는 사안들 중에서 공정률이 지나치게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화, 그러니까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1번의 인도네시아 누적 공정률 0%, 그다음에 5번도 보면 지금 공정률 10% 이하, 그다음에 6번도 보면 지금 연수센터 가동률 40%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저는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차관님, 어떠세요? 답변할 게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사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면이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이게 사업 진행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는 거고 또 구조적으로 저희가 다년도 사업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이 있고 이런 부분이 함께 맞물려 있어서 이렇게 초당적으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건 그런데 0%, 40% 이거는 지적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허락하시면 우리……

○소위원장 김영배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개발협력국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공정률은 0%입니다. 이유는 이게 2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24년도에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협의가 지연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25년 9월에 협의의사록인 RD가 체결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RD 체결 이후에 사업자 선정을 26년 1월에 완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26년 1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 그래서 원래 당초 늦어졌었던 RD 체결이 이번 9월에 타결이 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늘 초기에 공정률이 낮다든가 집행률이 낮은 문제가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리고 뒤의 5번 10%.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지금 인도네시아 사업 말씀……

○소위원장 김영배 5번 중남미.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이 중남미 사업도 과테말라에서 24년도에 시작된 사업이고 이게 원래는 26년도 종료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수원국에서 행정절차가 많이 지연돼서 저희 공정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5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년 7월에 협의의사록을 체결하고 집행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12월, 올해 12월에는 경찰청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대금도 내년도에 꼭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리고 그다음에 연수센터 40% 가동률.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연수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연수센터 가동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연수를 시행하는 비중이 높았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연수가 특정 개월에, 4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되는 바람에 가동률이 낮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KOICA를 통해서 가능하면 가동률을 높이고 또 지금 노후화된 시설, 예를 들면 보일러라든가 전기차단기처럼 꼭 집행해야 되는 노후화 보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함으로써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연수센터 같은 경우는 노후가 됐다 그러면 계속 안 쓸 것 아니에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지금 노후화된 것이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필수적인 시설이 노후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시설이 낡아 가지고 사용을 많이 안 하게 되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설이 개선돼야 되는 문제, 필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동원해서 좀 더 기본적인 것은 보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수 일정들을 좀 조정해서, 조금 더 연수가 몰리지 않는 시기에 연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향으로 우선 가동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연수 가동률을 더더욱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연수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면 그 기간이 빌 것 아니에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리모델링 계획은 따로 지금 잡혀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건 위원 5번 항까지 하고, 이제 6번 항부터 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예.

○김건 위원 6번 항은 지금 이게 연수사업을 외교부로 일원화한 건가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통합은 되었는데 구체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이 연수사업은 부처에서 각각 예산으로 올렸었던 사업을 저희가 전체적인 통합 ODA 달성을 위해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서 통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하고 열심히 협의를 해서, 기존에 부처에서 이미 수립해 놓은 연수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연수계획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KOICA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을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 의원실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그렇게 여유 있게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통합을 했다는데 구체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서 이런 거에 예산을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고 우리 당에서 이걸 문제 사업으로 꼽았거든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12억 감액이면 이 해당 사업에 어느 정도의 감액률이 되는 거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지금 전체 통합한 사업이……

○소위원장 김영배 727억이 연수비입니까?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아닙니다. 이 중에서 통합한 사업은 금액이 별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30억 이번에 신규……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30억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30억 중에 12억을 깎자?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10억 감액 의견입니다. 6번의 위 칸입니다. 6번의 위칸 10억 원 감액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영배 12억……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연수센터 12억 원은 아까 안철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요 방금 김건 위원님……

○소위원장 김영배 지금 지적하신 것은 위의 거다 말씀이지요, 통합한 것?

○김건 위원 이게 그러니까 10억 원이 감액되면 다른 부처 것 다 모았는데 사업이 다 안 되는 거군요, 다른 부처 사업이?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억 중에 10억이 감액되면 실제 타 부처에서 준비를 했었던 사업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 진행을 못 할 정도여서……

○소위원장 김영배 부처별로 연수시키는 것을 모아서 여기서 한다 이거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김건 위원 소규모라서 모아서 하는 건데 막판에 모으다 보니까 구체 계획을 하나도 못 냈다는 거거든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아닙니다. 구체 계획이라는 것이 원래 부처에서 세워 놓은 계획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N-1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올해 다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원래 계

속하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계획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인 통합계획은 이 사업들을 어떻게 통합 성과 평가를 할 것인가라든가 어떻게 KOICA 사업 내에 효율적으로 통합시킬까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준비를 하고 실제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들을 KOICA에서 관리 감독하면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의 것은 보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밑의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연수센터 이걸 제가 봐도 68억 중에, 이것 그냥 예산 확보한다는 것뿐이지 아까 얘기했던 리모델링 필요한 부분하고 그 계획이 안 서 있으니까 이거는 삭감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안철수 위원 730억 중에 10억 정도 감액하는 거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연수센터 지원비가 68억이니까, 68억 중에 12억을 깎자는 거니까, 그렇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괜찮으시다면 KOICA에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하시도록.....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세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말씀드리겠습니다.

KOICA 경영전략이사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판교로 가서 연수센터를 만들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연수생들이 보통 1·2·3월에는 안 오고 2분기에서 한 10월 달까지 오다 보니까 점유율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에서 연수를 하는 우리 연수기관들에 바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KOICA에서 하루 정도는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제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연수센터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그동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깎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소위원장 김영배 68억 이게 지금 리모델링 비용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예, 아닙니다. 아는데 저희가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은 한시소요로 해서 한 2억, 3억씩을 받은 적은 있는데요. 이 경비까지 깎이게 된다고 그러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지금 68억이 운영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비용을 더 깎으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가동률이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김건 위원 그 운영비용이라는 게 보통 인당 계산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동률이 40%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고정비용이 있습

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에 어떤 전기료라든가 그런 큰 차이보다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 고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68억 3200만 원은 소요가 다 고정비용밖에 없나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수 자체는 외부에 위탁한 기관에서, 보통 2주짜리면 저희 KOICA에서는 하루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연수 기관으로 배정되고요.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종료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68억으로 1년을 운영하면 그중에 당연히 고정비용은 전기료 들 거고 뭐도 들지만 연수생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령 100%로 잡고 예산을 잡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40%밖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60%에 대한 비용은 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깎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저희가 과거에 그런 계산을 보통 하지 않았고요. 보통 연수생들이 들어오는 경비가 항공료라든지 뭐 숙박,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부 연수기관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KOICA 내에서는요 하루이틀 정도 오리엔테이션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2주짜리 프로그램이면 외부의 위탁받은 기관에서, 식비라든지 강사료 등 이런 것들은 그쪽 기관에다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분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 그렇지만 운영비가 당연히 사람에 따라서 들어오면 타월도, 씻어야 되고, 그런 게 늘고 적고 다 있는 것 아닌가요, 비누도 넣어야 되고? 그런 게 다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과거에도 이 정도 점유율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는 연수생들이 보통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꼭 점유율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하고 많이 연동되는 것보다는 고정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건 위원** 이게 전액이 고정경비성이라는 거예요?

○**안철수 위원** 그런데 계속 가동률 40% 정도 수준으로 결국은 유지하면서 국고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것을 외교부나 KOICA에서…… 이 리모델링 비용 KOICA 예산으로 책정합니까, 아니면 외교부 예산으로 하나요? 어떻게 되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KOICA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KOICA 예산으로?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제가 설명드린 것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정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이고요. 가동률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 감액을 하신다고 하면 가동률이 사실은 높아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효과 없이 그냥 저희가 써야 되는 고정비용이 깎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연수센터가 가동률이 40%밖에 안 되더라도 예산이 불용이 나거나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들어가는 예산들이 40%가 됐든 어떻게 됐든 하여튼 똑같이 고정비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사실은 저는 KOICA 사업 중에 보면 여러 나라들에 예산이 많이 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연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고 왔는데 연수센터가 이렇게 약간 허름하면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웃기는 상황 아닌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아이들 화장실 문제 하나 해결 못 해 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애들이 학교에서 화장실 안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 그런 데다 애들 해 놓고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올 때, 볼 때 대한민국 참 괜찮은 나라다 이렇게 해 줘야 정상인데 이것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가 사실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격에 맞게.

○소위원장 김영배 300실이면 꽤 큰 연수원인데. 그렇지요? 몇 평이나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

○소위원장 김영배 그것 좀 이따 답변하시고.

김건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김건 위원 아마 여기 센터에 공실이 충분히 있었지만 외부 숙소를 이용한 케이스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유가 그런 건가요? 너무 시설이 낡고 그래서 기피해서 그런 건가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주짜리 연수를 할 경우에 연수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연수기관들이 지방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만 KOICA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방에 있는 연수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제가 그 비슷한 질문,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시설이랑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김건 간사님 질의는 거기가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니까, 너무 낡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오려고 해서 이용을 안 하려고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냐라고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게 아니고 그렇다기보다는 지방으로 바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잖아요. 이용률이 왜 저조한 거예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인프라 부분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수 자체를 지방에서 하는데 최대한 저희 KOICA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1번 시설이 낡아서, 2번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그 두 가지입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강선우 위원 아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앞에 답변하실 때 가동률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로 연수가 특정 시기에 몰려 가지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연수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특정 시기에 몰리는 이유는 뭐고 어떻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지금 4~10월 사이에 모든 연수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오히려 연수원 가동률이 높아졌다가 전체 연도로 봤을 때는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통계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조정할 수 있냐 하면, 사실은 개도국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시기는 아무래도 4~10월 이 사이이기 때문에 집중되는 면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다가 노력해 볼 예정이고요.

아까 지방연수 시행 비중이 높은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하면 지방의 연수시설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일부러 제고시킨 정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이 실제로다가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도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피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연수 가동률이 아주 현저히 낮아지는 것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연수 가동률을 낮게 만든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이유도 있고 저 이유도 있고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얼마 증액해야 된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야당 위원 아니고 여당 위원인데도.

그러면 리모델링은 가동률이 낮은 것에는 큰 원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아까 설명할 때는 시설이 너무 낡아 가지고 가동률이 낮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설명하실 때는 이 시설이 낡은 것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시설 가동률 높이는 거랑은 크게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지금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시설이 낡은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으로 저희가 연수 조정이라든가 시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선우 위원** 그러면 가동률 낮은 것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무슨 인과관계는 고사하고 그냥 연관도나 이런 것 분석한 자료도 없어요? 왜 이용하지 않는지 이런 것.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아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나중에.....

○**강선우 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지 리모델링 때문에 낡아서 안 온다더라, 지방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안 온다더라, 정책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다더라, 이게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 달라든지 아니면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쭙볼 때마다 지금 답이 달라져서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원안유지를 하자고 주장하려고 해도 뭐 근거가 있어야지 소위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앉아서 들은 답변만 해도 다 달라요.

그리고 4~10월 사이에 연수가 몰리고, 그러니까 다른 월에는 없고 이게 무슨 통계상으로 보이는 오류 비스듬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몰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는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또 방금 답변에서는 몰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몰리도록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연수센터 관련해서 운영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증액 예산이 아니라 24년도부터 조금씩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24년도에는 63억, 25년도에는 66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68억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게 고정비용이라고 아까 얘기한 거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감안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보면 연수시설들을 혼자 자기 사업만 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그것 굴리느라고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늘 쳐다보면서 저것을 갖다가 일반 시민들한테도 공개를 하고 청년들한테도 주고. 아까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같은 경우만 해도 청년들 무슨 활성화시킨다고 한다잖아요. 그런데 평통 같은 경우 그 연수원을 쓸 수만 있으면 모여서, 장소 있겠다 공짜로 자고 1만 원씩만 받아도 되고 제가 볼 때는 그 겨울에 전국에 있는 단체들한테 공개만 해도, 특히 위치도 분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고정비는 어차피 나가는 거고, 인건비 있는 거고 전기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물론 다른 비용이 추가로 좀 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들 외교부에서 어디에 통합해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 뭐지요? 아까 김건 위원님 지적하신 ODA, 다른 부처들하고 연수 통합했다면서요. 연수센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KOICA에서 하는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 연수 사업들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통합해서 쓰는 방안도 있고 또 다른 데서도 이런 연수가 필요한 기관들이 많은데 신청 받아 가지고 사전에 하면 이걸 얼마든지 내가 볼 때는 평통 같은 데는 한 달 쓰겠다고 당장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가동률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추가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장님,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타 기관 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서 가동률을 높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이거를 김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안철수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동률 이게 고정비라고 하니까 고정비는 해 주는데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동률에 대해서 올릴 방안을 구조적이고 좀 제도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실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 지금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하는 게 먼저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게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후자는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전자, 센터와 관련된 가동률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간에 한번 제도 마련하자마자 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보고를 드려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게 하면 고정비라고 하는데 감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액의견은 이렇게 일단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건 위원 7항은 또……

○소위원장 김영배 7항도 있나요?

○안철수 위원 7번.

○소위원장 김영배 7항, 이거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차량…… 사실 저희가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직원 안전 문제와 많이 관련이 돼 있는 사안이고요. 또 이게 내구연도가 있습니다. 내구연도 끝나고 적기 좀 교체를 해서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갈수록 지금 국산 차를 구입해서 여러 가지 가격 문제, 가격 입장에서 좀 어포더블한 그런 걸 하고 있고 이게 좀 현지 상황에서 차량 정비가 어렵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외국산 차량을 구입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일정 연도가 되면 그걸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거는 아마 인요한 의원님이 보니까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 거는 따끔하게 혼을 내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안 해 주겠다기보다는. 그렇지요?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현지에서 차량을 사면 국산 차나 현지 차나 차량을 비교하면 어때요? 비교하면?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은 국산차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싸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서 달러를 통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국에서 사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고 달러를 통해서 사는 게 또 반드시 싼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만 굉장히 국산 위주로 지금 구입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적됐는데 실제 불용액이 어느 정도나 발생을 하고 있어요, 매년?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허락하시면 예산 담당국장……

○외교부조정기획관 문인석 조정기획관입니다.

말씀하신 저희 재외공관 차량 불용률을 보면 사실 코로나 기간 때인 2020년, 21년, 22년 이때가 한 79%에서 85% 정도로 불용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반적으로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부품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실제로 23년도부터는 23년도 집행률이 97.5%, 24년도는 98.1%, 지금 25년 10월 현재까지 82.8%인데 현 추세대로 하면 약 99%, 한 사오천만 원 정도 아마 좀 남을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강선우 위원 공관 차량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부품이나 아니면 자동차 보험에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는 한은 국산차량 구입의 우선 원칙을 명확하게 잘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인요한 의원한테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의원이 이렇게 감액의견을 낸 이유가 공관장 차량이 보통 단가가 행정용의 두 배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후화가 아직 많이 진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공관장 차량을 바꾸는데 우선 쓰면서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자기는 이렇게 의견을 냈다 전달받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차관님,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통 마일리지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구입 연도 기준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 대개 신청을 해도, 저도 사실은 짧게나마 공관장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해도 그게 실제로 배정을 받아서 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차량에 비해서 공관장 차량을 우선 순위로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그거는 그런 경우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셨을 건데 실제로 저도 기관장 하면서, 구청장 하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차 바꾸라고 하는데 제가 전임자 쓰던 거 끝까지 썼거든요. 나중에 위험하다고 그래서 바꿨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음하고 또 달라요, 현장에서는. 아까 인요한 의원님 그냥 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사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신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오늘 이거는 명확하게 공관에 지침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신년도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거는 지침을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가 승인을 내 주지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요.

○김건 위원 저도 공관장 해서 경험이 좀 달라 가지고…… 지금 이 기준이 앤드로 돼 있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건 위원 10만km, 5년 그렇지요? 10만km가 되고 또 5년도 넘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해외에서 제가 하다 보니까 국산차 우선이니까…… 그런데 국산차가 고급차인데도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그런데 고장이 나는데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잘 안 고쳐지면 그러면 2호차를 탑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고장 나고 막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 마일리지 10만이 안 돼요, 몇 만이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앤드를 둘 중에 하나만 채우면 하는 걸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좀 상세하게 최근에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OECD 회원국 주재 공관은 6년 경과하고 12만km 이상을 타야 차량 교체 자격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앤드로 해야 합니다.

○**김건 위원** 앤드로 지금 돼 있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다음에 여타 공관, 비특수지 공관이든 특수지 공관은 6년 경과하고 10만km 이상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오어로 돼 있습니다.

○**김건 위원** 여타 공관은 오어로.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오어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특수지, 아주 험지는 5년 경과해도 차가 많이 노후되기 때문에 5년 경과 그다음에 9만km 이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어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사실은 아까 제가 연수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외교 역량이 강해지려면 인프라도 사실 강한 게 맞거든요. 그리고 차량도 좀 이왕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진국인데 차량도 괜찮은 걸 타야지 당연히, 그건 맞는 말씀인데 아까 인요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다른 직원보다 공관장이 상대적으로 공용으로 먼저 필요한, 공무에 먼저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지 외교관 차량을 노후화했는데 타고 다녀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김건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기준에 한번 잘 보세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한 걸 타고 다니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차량 교체 기준이 행정 차량도 그 자격이 되고 공관장 차량도 그 자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개 다 경합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공관장이 우선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려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 취지를 감안해서 지적이 나왔다는 걸 공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건 위원**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밴쿠버 총영사 하는데 제 차가 에쿠스거든요. 에쿠스인데 현 밴쿠버에 에쿠스가 딱 한 대입니다. 그래서 선진 효과는 좋은데 이게 차가 조금만 고장이 나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갔는데 차가 노후화되고 잘 안 타니까 자꾸 문제가 있는데 12만km를 채울 방법이 없는 거지요, 차를 안 타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바꿀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윤후덕 위원** 경우의 수가 많네요.

○**김건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상황에 아무리 본부에다가 이건 이런 상황이라서 좀 바뀌야 되겠다 그래도 잘 안 바뀌 주더라고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이거 감액의견 부분들은 이 정도 점검을 하고요. 크게 보면 감액으로 이렇게 결정된 거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잘 점검해서 나중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 보고 조금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자료 6쪽입니다.

증액의견 보고에 앞서서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제기된 세부사업이 5건 있습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동맹기반 강화에 대하여 주정부·주의회 협력팀의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과 함께 1억 8700만 원 감액의견과 주요 현안 특화 자문회사 및 정책홍보 자문회사 추가 고용을 위한 4억 2400만 원 증액의견이 함께 제시되었고.

7쪽입니다.

2번,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내역사업인 남동유럽·흑해경제권과의 실질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4600만 원 전액 감액의견이 그리고 한-러 상호이해증진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3번,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운영에 대하여 심포지엄을 일반용역비로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 재검토 필요 지적과 함께 1억 5000만 원 감액의견이 제시된 한편 조직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증액의견이 2억 900만 원 또는 3억 8000만 원 규모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4번, 공공외교 역량강화 중 내역사업 국민 공공외교 사업 관련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 4억 5500만 원 감액, 온라인 플랫폼 구축 1억 원 감액,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7억 원 전액 감액의견과—10쪽에 이어집니다—한국전 참전국가에 대한 보은 순회공연 신설을 위한 15억 원 증액, 한·중 우호 카라반 사업 신설을 위한 10억 원 증액, 국민 공공외교 온라인 플랫폼의 조기 구축 및 운영 개시를 위한 5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 공공외교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1억 원 감액의견과 5억 원 증액의견이 동시에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의견……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죄송합니다. 1개 더 있습니다.

11쪽의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세부사업에서는 청년인턴 채용에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 예산 5억 원 감액의견과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에 신규로 국제청년포럼 개최를 위한 비용 34억 원 증액의견, 외교역량 강화 정책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는 기본적으로 감액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감액 불수용을 희망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와 관련해서 동맹기반 강화를 위한 주정부·주의회 협력팀은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된 주정부와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팀입니다. 올해도 몬타나, 오레건, 조지아, 테네시 등 여러 주지사가 방한하여 우리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현직 주지사의 내각 진출 또는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례도 다수임에 따라 장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주정부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비해 50개나 되는 미국 주들과의 협력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력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번,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관련입니다.

남동유럽·흑해경제권과의 실질협력 강화는 그간 사업비 및 유류비 전반에 대해서 집행

실적이 전무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 사업비는 최근 5년간 60%에서 80% 대 이상의 집행률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일부 국외 협의 집행 부진은 그간 코로나 유행 등으로 인해서 BSEC 협의체 참석에 어려움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사업 계획에 맞게 충실히 집행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번,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급변하는 중남미 시장 동향을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듣기 원하는 우리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에 중남미 연사를 초청하고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해외 연사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4번 공공외교 역량 강화 관련입니다.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은 지방청년에게 지자체의 국제 교류, 지방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제공해서 지역인재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외교 분야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지방청년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간 인재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공공외교, 온라인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는 외교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일반 국민과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 참여를 확대하여 K-이니셔티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포럼, 공모형 사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예산편성이 꼭 필요합니다.

국민 공공외교 신규 공모형 사업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관련해서는, 코리아파운데이션 소관의 국민공공외교프로젝트 사업은 2025년부터 예산 전액 삭감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재외동포청 사업은 재외동포 단체 지원 사업이므로 공모형 사업과 차별화되며 중복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5번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들에게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외교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이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조실 주도로 정부 측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감액한다면 청년들의 국정 참여 기회가 축소되고 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김건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배 예, 말씀하십시오.

○김건 위원 지금 외교부에 전체 공무원 활용에 관한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규모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어떻게 하고, 전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인력 수요가 많고, 전체적인 계획이 따로 수립돼 있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건 위원 결국 예산만 따면 공무직을 그냥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사실은 인력 수요를, 저희가 티오를 받아서 정식으로…… 늘정직해야 하겠지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저

회가 관계 부서하고 할 때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업무 수요는 크고 대응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공무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외교부가 티오를 따라 되는데 티오를 못 따니까 자꾸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 이러다가…… 여기 예산 중에도 공무직 채용이 여러 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하더라도 건건별로 할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간다든가 앞으로 티오로 전환한다든가 그런 청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하겠는데 그런 것 없이 급하면 마구잡이로 그냥 막 이렇게 예산으로 밀어 넣고 이런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무직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물론 업무 수요가 때로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 방안을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공무직은 그 사건 이후로 채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공무직은 현재 채용이 스톱돼 있다면서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가 지금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계속 내포하고…… 지난번에 드러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직 채용 문제도 각 부서 별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큰 것들이잖아요. 차관님도 인사국장 하셨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참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종합적으로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인력 확보라는 게, 그러니까 금방 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안부에서 안 준다 그 말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아무래도 거기는 전체적인 정부 관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애로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또 의견 주시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외교적 역량이라는 게 완전히 진짜 구조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밖에 나가 보면 우리의 국력에 비해서 외교적 역량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방금 차관님께서 공무직 제도, 공무직…… 편법은 아니지만 약간 피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땀질식의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물론 부처 간에 조정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저는 외교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이제 외교는 바로 경제고 과학이고 안보고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결국 바깥의 경제적, 문화적, 다양한 환경의 영토를 어떻게 확장해 가는가가 우리가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경쟁력인데, 이런 부분의 고민을 이런 식으로 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저는 안타

까워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힘이 없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외교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될 이런 시점에서 국가 경영의 하나의 축으로서 자리매김이 더 강화돼야 되는 데 그런 큰 틀에서 바꾸고자 하는 열정이나 노력이나 비전 같은 게 굉장히 좀 열악해 보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이라든가 AI를 활용한다든가 인력 확충이라든가 재외공관의 역할을 재정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여러 가지 구상을 조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태호 위원 물론 고민하고 노력하시겠지만 기업이 어떤 지역에 진짜 직접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 우리 공공기관의 환경이, 사실상 과학관이라든가 주재관이 꼭 하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현장국감을 보면. 그래서 차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계획 중이다. 고민하고 있다’ 이것은 그냥 고민하고 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우리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집권당인 민주당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하나의 로드맵을 굉장히 강력하게 건의해서 큰 틀에서 변화를 꾀야 된다는 의지를 좀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 늘 예산 이런 것을 보면, 현장 보면서 좀 갑갑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래 가지고 미래로 갈 수 있겠느냐, 싸울 수 있겠느냐, 전사가 없는데 무슨 싸움을 하느냐. 동의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도 열심히 더 협력을 해 나가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차관님, 외교부 지역국 내에 정세분석팀이 어느어느 국가에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정세분석팀이 북미국에 하나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이렇게 지역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어디어디에 있다고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동북아국에 중국 정세분석팀이 있고요 일본 정세조사분석팀이 있고 러시아 정세분석팀이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미국은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미국은 이번에 만든 걸로 돼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비자 등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산 증액 찬성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산이 대대적으로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교부도 이런 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 미국 주지사들이 다수 방한을 하고 한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전현직 주지사들의 내각 진출 사례도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주정부와의 협력 필요성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정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인력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는 예산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관님, 공무원 채용, 증원과 그다음에 관련된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하는 것에 있어서 외교부가 적극성을 아주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윤후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7페이지 상단에 남동유럽·흑해경제권에 관한 실질협력 강화에 대한 예산

을 작은 예산이지만 4600만 원을 감액하라고 존경하시는 김건 간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남동유럽이 어딘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제가 챗GPT에서 체크를 해 봤어요.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등등 이런 괜찮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최근 5년간 인사교류를 집행한 게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실적이 전무한 것은 그중에서도 남동유럽·흑해연안국 인사교류 700만 원 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아닙니다. 내역사업 4600만 원 내 내내역사업 700만 원짜리 사업의 5년간 집행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과, 삭감 의견은 상위 내역사업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봐요. 이대로 그냥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남동유럽이나 흑해경제권의 국가들하고는 아예 외교 관계를 안 가지고 있는지 또는 아예 교류를 안 하는지, 5년 동안 아예 예산집행이 안 됐는지, 표현으로 보면 이런 얘기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차관이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잠깐 허락하시면 유럽국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예.

○외교부유럽국장 **임형태** 유럽국장입니다.

내역사업인 흑해경제권하교의 실질협력 강화가, 흑해경제협력기구라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흑해를 접하고 있는 한 12개 국가들이, 사무국이 튀르키예에 있고 여기에 저희가 부분대화상대국으로 협의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협의체 회의에 출장 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교류하는 예산이 여비가 한 600 정도 있고 가서 주게 돼 있는데, 이 협의체가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한 3년 정도 화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회원국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참여 문제가, 그것도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출장을 갈 수 있는 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향후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이 협의체라든가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여비 집행이나 이런 것을 높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되면 영상으로만 회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외교부유럽국장 **임형태** 저희가 협의체나 이런 데 참여가 많이 제약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간사님이 계신데……

○안철수 위원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 동일 지역 대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흑해경제협력회(BSEC) 그 사업 그거는 그대로 지금 꾸준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지금 남동유럽·흑해연안국 인사교류 이 건만 5년 내내, 코로나 다 끝난 이후에도 집행 실적이 전무하니까 이것 삭감하자, 저는 김건 위원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외교부유럽국장 **임형태** 지금 허락하시면 유럽국장이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외교부유럽국장 임형태 4600만 원 중에서 지금 3900만 원은 방금 안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ICT 협력을 해 갖고 서로 방문도 하고 초청하는 사업으로 돼 있고 금년에도 그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마다 한 70~80% 이상, 금년에 90% 이상 집행이 되는데 만약에 46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됐던 사업을 내년엔 할 수 있는 상황이,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유지가 돼야 되고요.

인적 교류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 올린 대로 협의체가 최근에 화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원국 문제로 제대로 진행이 안 돼 갖고 공전이 되면서 저희가 참석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황이 변경되고 협의체가 재개되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것 실무 직원 비행기 값밖에 안 되잖아요, 600만 원이면.

○외교부유럽국장 임형태 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실무 직원 여기에 출장 보낼 여유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5년 동안 700만 원을 계속 못 썼는데 이 예산 계속 안고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4600만 원은 전액 삭감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BSEC 하는 그 사업 예산은 남기고 이 출장 예산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700만 원은.

○소위원장 김영배 700만 원 말씀이지요?

○김건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이것 5년간 없었다는 거는 좀 황당하잖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소요가 생길 때 나중에 다시, 700만 원이면 다른 것 이렇게 좀, 예비비 써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북극항로 문제도 남아 있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이후로 우리가 다변화 그리고 소다자화 이런 여러 방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도 러시아하고 일정하게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저는 국회 간의 교류가 빨리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6페이지에 있는 동맹기반 강화의 조선협력 정책홍보 자문회사 추가 고용 이거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증액의견 낸 것에 이것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기본적으로 제가 아마 저희 컨설팅회사에 자문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세한 거는 북미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외교부북미국장 홍지표 북미국장입니다.

올해 협력사업 해서 자문 예산, 자문회사를 추가로 고용을 해 가지고 이번에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에 나타난 원자력 관련 협력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소위원장 김영배 조선이 아니고 원자력?

○외교부북미국장 홍지표 예, 조선보다는 지금 원자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여기 지금 증액의건 낸 거는 조선협력 관련해서도 추가로 그러면 더…… 지금 현재 예산은 원자력이고?

○외교부북미국장 홍지표 예, 지금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선이 먼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현안 특화된 자문회사를 고용할 것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협력과 관련해서는 양자경제국에도 있고 저희도 있는데 저희는 군함에 특화된 부분입니다만 지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또는 원자력 협정 문제에 대해서 미 의회의 동의 또는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왜 원자력과에 없고 북미국에 있지요?

○외교부북미국장 홍지표 지금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통일된 거고요 어차피 원자력국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김상욱 위원 지금 그러면 증액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바꾸는 거나 아니면 이번에 한미 핵협정이나 이런 부분들, 미국 현지 로펌이나 자문사 이쪽 관련된 예산 늘리는 건가요?

○외교부북미국장 홍지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 정도만 늘리면 충분한 건가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두 가지.

○외교부북미국장 홍지표 물론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협의를 해 보는 과정에서 더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서 추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잠깐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6쪽의 동맹기반 강화 그 사업이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조정식 위원 특화 자문회사 및 정책홍보 자문회사 추가 고용인데 30쪽에 보면 해외 진출기업 활동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셨지만 저도 현재 이 자문료 집행 수준으로서는 이게 턱도 없다, 그리고 실제 요즘에 보통 1개사당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약 한 33만 불, 30여만 불 정도 수준인데 이거 가지고 턱도 없기 때문에, 최소 50만 불 이상을 요즘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워싱턴에서는? 그래서 자문회사 요구 비용을 현실화시켜서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냈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사항인가요?

○외교부북미국장 홍지표 예, 이것하고 별도의 사안입니다.

○조정식 위원 별도의 사안이에요?

○외교부북미국장 홍지표 예.

○조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것도 현재 꼭……

○김건 위원 저……

○소위원장 김영배 예.

○**김건 위원** 요새 한 달에 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리테이너 베이스(retainer basis)로? 워싱턴의 로펌.

○**외교부북미국장 홍지표** 사실 로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김건 위원** 아니, 일반적인 단가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4만 불 정도 했는데.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1년에 한 30만 불 할 겁니다.

○**김건 위원** 30만 불, 1년 30만 불?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건 위원** 그러니까 여름 두 달 빼고, 그렇지요? 7~8월 빼고, 10개월에?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30만 불도 있고요.

○**김건 위원** 한 달에 3만 불?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아주 간단한 건 몇 만 불짜리도 있고요.

○**소위원장 김영배** 지금 세부사업명으로 3번하고 4번은 조금 논의가 더…… 일부 꼭 필요한 경우는 말씀을 주시지요, 지금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예, 안철수 위원님.

○**안철수 위원** 3번 사업에서 감액의견에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연구원 세 사람이 무리 없이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다 그랬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게 규모가 별로 크지도 않고 전문업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정부 지침상 행사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직접 추진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태여 이런 정도의 외부 전문업체를 이렇게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 위의 감액의견은 이게 행사를 외부에 맡기지 말고 직접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밑의 증액 예산은 연구원 추가 고용 예산이지요. 인건비잖아요. 이거는 지금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조정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약간 상반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외교 플랫폼 부분하고 공공외교 공모사업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거든요, 지금.

○**안철수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이 사업이 다른 쪽에 보면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파견이라는 그 사업하고 목적이나 대상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감액의견에 찬성을 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로 또 보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있는데 이게 과연 기존 시스템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국민참여형 공공외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에 우수 사례 공모사업이 있는데 또 이 기능이 중복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구태여 따로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답변해 주세요.

국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허락하시면 국장이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외교부조정기획관 문인석 조정기획관입니다.

말씀하신 사업 중에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을 따로 구상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사업의 25년도 선발 결과를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비수도권 청년의 지원자 비율은 20%에 불과하고 최종 합격자 비율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16%에 그쳤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의 인원을 증원을 한다 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공공외교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사업은 말 그대로 문화공공외교 그리고 지식공공외교, 퀴즈 온 코리아라든가 한국어·한국학 사업 그리고 정책공공외교, 디지털공공외교 이렇게 정말로 공공외교와 문화외교 쪽에 집중된 그러한 업무를 같이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해 나가는 역할이고요.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은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을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공관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아울러서 지방 소멸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과제를 저희가 따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경제 활성화, 즉 그 지역에 특화된 상품을 해외에 어떻게 수출해 나갈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재생, 농어촌 재생 이런 부분에 저희가 특화를 해서 그 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관과 같이 업무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 소멸이라든가 지역 격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없이 그리고 모든 정부 부처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게 수도권은 제외를 해서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벌리는 것 아니냐, 차별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여러 차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것 자체는 저희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법에 기반을 해서 사실은 그런 것을 설계를 했었고요. 거기 보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대학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50명을 사업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50명을 서울·수도권까지 합쳐서 17개 시·도에,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3인씩 배정을 하면 인구가 작고 떨어지는 데일수록 사실은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자연스럽게 그런 보정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8명 그리고 세종시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재설계하는 방향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 길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결국은 합쳐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 같아요. 이렇게 여기 50명을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그 사업에다가 합쳐 가지고 따로 이 부분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에 해당되는 일을 맡기고 또 다른 부분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업무를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평가지표도 일원화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조정기획관 문인석** 허락해 주시면 조정기획관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타당하신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자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자를 받아서 용역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 절차이고요. 지역……

○**안철수 위원** 지방청년인재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외교부조정기획관 문인석** 저희가 지방청년인재는 선발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각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인재 육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프로그램을 거치고 아울러서 저희가 과제로 주는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연구 과제 이런 것을 미리 다 받아 가지고 지방 쪽에서 미리 추천을 받은 다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과제에 맞춰 가지고 제대로 선발됐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안철수 위원** 그런데 수도권도 뽑는다면데요?

○**외교부조정기획관 문인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평하게 3명씩, 3명씩 하면 자연스럽게 아마 지역별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증 효과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인구 비례에 따라서 사람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철수 위원** 그러면 왜 지방청년인재라고 이렇게 사업명을 붙였습니까,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뽑는데?

○**외교부조정기획관 문인석** 위원님,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어떻게 따지면 다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그렇게 하나의 지방 단위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욱 위원** 아까 질문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조금만 더 확인하고 싶어서요.

동맹기반 강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4억 24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미 외교 성과가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 법령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대미 의회외교 강화하는데 미 현지 의회 법률자문회사 고용비용이 14억 8300만 원 그리고 미 현지 홍보 공공외교 자문회사 고용비용이 4억 1000만 원, 기존에 편성돼 있는 데서 4억 24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북미국장이 설명드리게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아무래도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외교부북미국장 홍지표** 일단은 법률,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 특히 핵 문제는 미 의회의 협조가, 협조라 함은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한미 간의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김상욱 위원** 예산이 필요한 건 아는데 제가 여쭙보는 취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라도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을 바꾸어야 되고 미국 의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외교부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핵협정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지금 요구하시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예산이면 충분한 건지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건

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외교부북미국장 홍지표 그 구체적인 브레이크 다운(break down)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겠습니까?

○김상욱 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실로 상세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외교부북미국장 홍지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국장님, 저희 의원실로도 관련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마 김상욱 위원이 계속해서 상세하게 이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우려입니다.

충분하세요?

○외교부북미국장 홍지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막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스코프(scope)가 얼마나 되는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것은 사실 미리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충분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충분하게.

○외교부북미국장 홍지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방금 전에 강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 안 되면 안 되니까 상세하게, 원래 국회가 감액 위주로 하는 건 맞긴 하지만 필요할 때는 또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북미국장 홍지표 알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감액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만 답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허락하시면 공공외교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예.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공공문화외교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국민 공공외교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 기존의 플랫폼을 통합 확장하는 방안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이 있고 KF에서 운영했던 국민 공공외교 웹사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업무, 실무 담당자들이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기 위한 비공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KF 공공외교 프로젝트 웹사이트는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국민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 사이트를 공개 사이트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들과 DB들을 함께 통합하여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기존의 국민 공공외교 우수 사례 사업이 있는데 새롭게 공모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은 일반 국민들이 이미 공공외교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상을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공공외교를 좀 더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3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일반 국민들의 참여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저희가 그러면 실제로 사업을 기획을 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새롭게 1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제로 국민들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이 조금은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홍보나 이런 측면보다는 실제로 참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철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을 좀 더 발전적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연속성을 부여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전 노하우들도 계속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온라인 플랫폼 구축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들과 플랫폼을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 공모전과 새로 공모 사업은, 아무래도 공모 사업은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 사업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우수 사례 공모의 주제라든지 참여 대상들을 참고하여 동일하게 세팅을 하고요. 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새롭게 신설 사업으로 제안 요청을 드렸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우수 사례 공모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이런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 질문입니다.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공모 사업은 시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이미 본인의 자비로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같이 함께 멘토링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 훨씬 더 이익이 되고 이해가 되고 역량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참여하는 의미와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사업을 설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제 어느 정도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간이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자, 보시지요.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인력 증원 문제였으니까 이것은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고, 밑에 자문회사도 큰 이견은 없는 것처럼 아까 말씀됐고.

2번의 700만 원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되고, 러시아도 증액하는 데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남미 중의 아까 안철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비를 일반운영비로 잡는 건 문제가 있다, 제가 봐도 이것은 그렇게 수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 뒤에 협력센터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증액하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면 내가 볼 때는 아래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4번 중의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비 이것을 증액하자는 의견하고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의사결정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내내역사업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 거기에 다른 걸 조금 더 신설해서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이견이 없으면 증액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정식 위원** 잠깐만요.

3번의 중남미 교류협력 강화 관계에서 보면……

외교부한테 좀 물어볼게요.

중남미 담당 누가 하시지요?

○외교부중남미국장 이주일 중남미국장입니다.

○조정식 위원 여기 보면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이 일반용역비로 증액 편성된 게 약간 모양이 좀 어색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제가 조직 및 사업 확대를 위해서 증액 의견을 밑에 또 냈지만 그런데 이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가 근래 들어서 특히 미중 갈등 문제라든가 리쇼어링 문제로 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우리의 기업 진출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한·중남미재단 설립 필요성을 지난번 국정감사 때 자료를 내기도 했었는데 특히 그중에서, 두 번째는 수용하신다니까 됐고 그다음에 첫 번째, 이 협력센터 심포지엄 관계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2010년 이후에 연 1회씩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중요성에 따라서 2회로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용역비로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외교부중남미국장 이주일 양해해 주시면 중남미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예.

○외교부중남미국장 이주일 그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연 1회 국내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심포지엄을 17년째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일반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중남미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연 2회로 하면서 중남미에 있는 연사들을 초청해야 되는 그 비용까지 감안해서 늘린 거고요. 그렇게 되면, 행사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 업체를 통해서 용역비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그러니까 그동안은 연 1회 행사를 하면서 저희 연구원 3명이 해당 센터를 준비하고 해서……

○조정식 위원 자체 행사식으로 했던 거지요?

○외교부중남미국장 이주일 예, 그렇게 해서 국내 연사들만 모시고 국내 기업이나 학계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17년째 되다 보니까 중남미 현지에 계신 분들 목소리도 같이 들어 보는 그런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중남미에서 연사들 초청하려면 항공료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늘렸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연구원 3명들이 본연에 연구하고 하는 활동을 그 준비 기간에는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을 못 하고 행사 준비에 시간을 굉장히 투입해야 되다 보니까……

○조정식 위원 그러니까 인력 부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교부중남미국장 이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일반용역비로 해 가지고 업체에서……

○조정식 위원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외교부중남미국장 이주일 예, 심포지엄을 연 2회로 늘리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늘렸던 것입니다.

○안철수 위원 그다음에 연구원을 2명 증액하는 건 우리가 동의한 거잖아요?

○조정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장 내년에 행사 준비를 하는 데서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만 해야 되니까, 현재 인력은 3명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일반용역 형태로 하지 않고, 아무튼 연사 초청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앞으로 연구원 2명 추가 고용해서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못 하거나 그럴 정도로 어려운 건가요?

○외교부중남미국장 이주일 연구원들이 자기들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업체를 사용하는 용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직원들이 다른 전체적인 시간에서 좀 쪼개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 원래 저희가 연 2회 하려던 거는 연 1회로 하고 대신 거기다 연사 초청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그런 정도로 해서 연 1회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감액 규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인데요. 이 심포지엄 자체 예산이 전체가 1억 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연 1회 하는데 2500만 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2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걸 연 2회로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4배가 돼서 1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횡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해외 연사 초청 비용까지 감안이 된 거라고 하면 일반용역에서 자체 수행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감액 규모는 사실상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의 자체 인력으로만 하던 거를 기업 요청에 따라서 중남미 현지 인사 초청을 프로그램으로 좀 더 확대하는 거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거를 다 해외, 외부에 맡겨 가지고 다 해서 이렇게 쪽 그제 아니라 만약에 방안이 내부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감액 비율을 좀 조정하든가 이런 방안은 어떨까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계속 논의하기가 좀 그러니까 뒤에 넘어가서 증액 의견들이 36건 있잖아요. 그거 다 듣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우리가 진행한 지 한 2시간 됐는데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분만, 그래서 3시 반이니까 3시 50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배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속도를 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러면 감액 및 증액 의견은 아까 증액 의견 다 논의하신 다음에……

○소위원장 김영배 예,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러면 12쪽, 증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6개 세부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1번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의 내역사업인 북핵문제 관련 협의는 전년 수준의 확보를 위해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의 내역사업인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은 사무국의

자체수입 추가 확충을 추진하기 위해 증액 의견이 4억 2700만 원 또는 5억 원 규모로 제시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3번 동북아시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중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에 한중 관계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번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중 서남아태평양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는 출장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1억 8000만 원 증액이고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에 대해서는 초청 횟수 2회 추가를 위한 증액 의견인데 규모는 2700만 원 또는 3000만 원입니다.

14쪽, 5번입니다.

아세안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한-해양동남아 협력에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3억 원 증액, 한-대륙동남아 협력에 베트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억 원 증액,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에 신규 사업으로 카이스트 아세안공학기술원 설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6번 대러 전략외교 강화의 내역사업인 대러 전략외교 기반 강화는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수행을 위하여 65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7번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내역사업 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중 중동지역 외교지평 확대 사업에 한-아랍소사이어티 지원을 통한 우리 기업 진출 및 문화교류를 위해 9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10번까지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더 할까요?

○소위원장 김영배 예.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16쪽,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사업에 8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정원에 따른 인원 충원을 위해 2억 원 증액, 정상운영비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1억 원 증액, 청년들의 글로벌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아프리카 창업아카데미 확대를 위해 3억 원 증액,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7억 원 증액—17쪽으로 이어집니다—아프리카 전시관 마련을 위해 4억 원 증액, 아프리카 주요국 재외공관에 재단 인력 파견을 위해 2억 원 증액, 아프리카 소재 국제기구 전문가 초청 등을 위해 5억 원 증액, 재단의 연구 전문성 제고를 위해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9번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사업 중 OECD Part 1 분담금 관련 의무분담금 미납방지를 위한 14억 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10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에 대한 10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NATO 신탁기금 121억 9600만 원, GGGI 지원 49억 200만 원, 한-카리브공동체 협력기금 16억 3000만 원—19쪽입니다—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1800만 원, 유엔개발계획 정규재원 기여금 48억 3000만 원, 유엔난민기구 분담금 1억 8000만 원, 세계식량계획 분담금 26억 원—20쪽으로 이어집니다—유엔인권사무소 분담금

5억 원 증액,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분담금 10억 원 증액 의견이고 글로벌 보건 기여 예산은 Global Fund, GAVI 등 글로벌 보건기구를 지원하는 것인데 증액 의견이 4억 원 또는 300억 원 규모로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장님, 증액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증액이 된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취지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최대한 성과를 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 주시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먼저 잠깐……

○소위원장 김영배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8쪽,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관련해서 김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일반 용역비로 증액 편성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사업 내용과 형식을 알아보니 사업 내용은 살리되, 그러니까 용역 전문가. 그런데 용역회사로 했을 때의 용역비 그것은 한 2000만 원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0만 원은 그냥 빼고, 삭감하고 내용은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삭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의하는 것 관련해서는 먼저 첫 번째, 북핵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인데 이게 2025년에 비해서 약 5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한미관계도 그렇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등등을 봤을 때 북핵 문제와 관련 협의 부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전년 수준 확보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25년 수준으로 5400만 원 증액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북핵 외교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본부장도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도 빨리 임명하고 열심히 출장다니고,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증액하는 것도 저는 같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 이것도 사실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한 개 심포지엄의 경우 세 시간 남짓의 발표한 질의응답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인데 1억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감액은 불가피한 것 같아서 그래서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준에서 좀 감액을 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식 위원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또 말씀 주시지요.

안철수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저는 우선 12페이지 2번 사업이요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에 대한 건데

저도 참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보면 기관 노력으로, 후원 기관이나 기업 유치로 재원을 또 추가로 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낸 안 그것을 유지해 저는 충분하고 오히려 주최 측에서 더 열심히 할 동인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사업,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는 이게 학술교류 문제인데 사실은 학술교류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더 효과적이고 아주 활발하게 잘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구태여 우리가 또 증액해서 더 막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정부안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번에 대러 전략외교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러시아와 전략적인 외교가 지금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사실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이런 실효성을 따져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정부안 정도로 유지하지 이것을 또 증액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9번 사업이지요.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의무분담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증액을 하자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추후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리해도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안을 유지하고 추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용 재원을 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10번까지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예.

혹시 외교부에서 따로 뭐 답변하실 게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야 위원님들 기본적으로 증액의 필요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북핵 관련해서는 늘 상시적인 예산이 있어서 항상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주평화포럼이나 국제평화재단 관련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도 확보를 하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이 설명하게 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소위원장 김영배 예, 그러세요. 앞으로도 필요하면 그냥 국장이 답변하세요.

○외교부외교전략기획국장 이성환 제주포럼 지원 건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정부 예산안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 관련해서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제주포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액 편성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20주년을 맞이한 제주평화포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자체 수입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지만 정부도 나름대로 마중물을 뿌려 줘야 이게 또 민간 측에서도 나름대로 또 추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김영배 위원님하고 윤후덕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대로 한 5억에서 4.27억 정도로 증액을 해 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부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제주포럼 관련해서 영내의 여러 정

치인들이나 학자들을 만나 보면 제주포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장해 왔는지가 느껴집니다. 물론 그래서 자리 잡았으니까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방금 설명 들은 대로 여전히 기반이 다져질 필요가 있는 상태이고 향후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위원님들의 견해처럼 자체적으로 평화포럼 자체가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고 저희가 판단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또 의견 주십시오.

아프리카재단 관련해서 아프리카재단에 제가 한번 여쭙보고 싶은 게 아프리카재단에 보니까 증액 의견들이 꽤 있는데 이게 아마 아직 재단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지금 하려면 이런저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ODA 예산을 연계해서 보면 한·아프리카재단이 ODA 관련해서 하는 역할이 뭐가 있나요? 어떻게 되지요?

○한·아프리카재단상근이사 감운안 허락하신다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그러세요.

○한·아프리카재단상근이사 감운안 저희는 ODA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KOICA라든가 이런 데에서 ODA 사업을 한다면 저희 재단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전문지식을 토대로 해서 KOICA하고 적극 협업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재단 그 자체를 빌려 가지고 무슨 아프리카하고 대단한 교류를 하시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한·아프리카재단상근이사 감운안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차관님, 이게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조직을 늘려 달라 혹은 아니면 뭐가 좀 작으니까 제대로 좀 뭘 하려면 번듯하게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인건비 등등등 하여튼 연구비 이런 것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안 필요한 데가 없거든. 그런데 당장 지금 그러면 늘릴 때 예산이라는 것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꼭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당장 아프리카와 관련해서 재단이 독자적인, 외교부 말고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될 어떤 꼭 필요한 일이 됩니까?

○한·아프리카재단상근이사 감운안 허락하신다면 제가 말씀 좀 괜찮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예.

○한·아프리카재단상근이사 감운안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미션은 크게 세 가지로 일단은 저희 재단 설립법상 되겠습니다. 하나는 조사·연구고요. 하나는 경제적인 교류·협력이고 마지막으로 국내에 대한 교육·홍보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기본적인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사실은 저희 재단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처음의 조사·연구보다는 저희들의 어떤 예산 제약 같은 것을 고려해서 특히 한국 기업의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의 도움이 크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각자 자체의 어떤 정보망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데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싶어도 마땅히 네트

워크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이런 중소기업들 아니면 중견 스타트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에 저희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아프리카가 상당히 위험 부담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그런 업무들 하는 것도 좋은데 부처 내로 보자면 지금 중소기업 이러는 건 중기부 업무거나 다른 부처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외교부에 있는 아프리카재단이 해야 될 좀 가까운 일이 ODA 예산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학술적 연구라든지 혹은 어떤 뭐랄까, 외교부에서 KOICA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어떤 연구를 하거나 모아 가지고 뭔가 사례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서 오히려 아프리카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사업도 좀 구조적으로 잘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면서 이런 사업을 좀 해 달라, 이런 성과가 있다 이렇게 좀 나와야 될 텐데 ‘별로 우리가 덩치가 작아서 아직은 할 게 없으니까 좀 늘려 주세요’ 이게 다 지금 그런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 주려 그래도 뭘 먼저 해 줘야 되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너무 많아 가지고.

○한·아프리카재단상근이사 감운안 일단 저희들이 8개 증액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가지고 8개가 지금 증액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좀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예.

○한·아프리카재단상근이사 감운안 그러면 저희들이 당장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가 경상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지금 22명입니다. 그러니까 70%밖에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에서 뭘 하느냐, 그다음에 차별성이 뭐냐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스타트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기부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 그다음에 국내에 걸친 것이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가 좀 특화된 그런 지원체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이게 중소기업들이나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은 네트워킹이 없습니다. 그 네트워킹을 하는 데 가장 좋은 효과적인 게 뭐냐 하면 협의체 같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국내 기업 그다음에 아프리카 기업들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연구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게 조사·연구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지역과가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센터로 출발할 때도 그렇고 조사·연구인데 그게 지금 많이 예산도 그렇고 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이 주어진다면 지역연구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보니까 러시아, 아중동, 아세안 나라들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예산들을 넣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자주의나 소다자주의를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런 예산들은 대체로든 다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덩치가 조금 큰 게 ODA 분담금 납부 영역이 보니까 액수가 좀 크기도 하고 한데요. 그래서 혹시 모를 분담금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건 간사님.

○**김건 위원** 먼저 아까 안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에 거의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제가 여쭙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결위원장 하신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 제가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요.

○**윤후덕 위원** 여기도 있어요.

○**김건 위원** 지금 예결위?

○**윤후덕 위원** 예.

○**김건 위원** 예결위원장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재단, 제가 한·아프리카 의원포럼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예산이 꼭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략이 이렇게 여러 개를 저희가 증액해서 보내면 예결위에서 좀 살아 남아서 증액이 될 가능성이 큰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좀 선별을 해 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보내 주는 게 더 가능성이 큰 건지 어떻게 저희가 가는 게 좋을지 좀……

○**윤후덕 위원** 현실적으로는 다……

○**김건 위원** 다 가능성 있는 것으로……

○**윤후덕 위원** 다…… 열심히 합시다.

○**조정식 위원** 요즘 우선순위를 좀……

○**김건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조금 가능성 있다고……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면……

○**소위원장 김영배** 국제기구 분담금 관련해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조정식 위원** 우리가 지금 몇 번까지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10번이요.

○**조정식 위원** 10번이요?

○**소위원장 김영배** 예, 국제기구 분담금이 10번까지 있거든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조금 담당 국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그러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특별히 감액에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거는 추가로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야기를 다 듣고 하겠습니다.

11번부터.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증액 규모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11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21쪽입니다.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ODA)는 한-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협정 협력기금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2번,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사업은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해 7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13번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사업은 신기술 안보 규범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위해 4억 7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22쪽 14번, 우즈베키스탄(ODA) 사업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 질병부담 경감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8억 5100만 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소아의학대학교 교육 연구 역량강화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9억 100만 원,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회의와의 연계기반 개선사업에 76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15번 키르기스스탄(ODA)는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억 3300만 원 증액. 16번, 협력사업 지원(ODA)는 사업조사관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7억 8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7번, ODA 선진화 사업은 ODA 수원국 내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개발협력전문관 파견을 위해 28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18번, 인도적 지원(ODA) 사업은 전년 대비 3460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재난 대응과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의 예방 등에 국제사회 동참 및 기여 등을 위하여 1000억 원 또는 70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5쪽, 19번 민관협력사업(ODA)는 전년 대비 154억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전년도 수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히 전액 감액된 개발도상국 현지 시민사회단체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0번, 재외국민 보호 사업의 내역사업인 재외공관 영사조력 제공 역량강화에 4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영사협력원 30명 증원 및 월 평균 활동비 인상 필요에 따라 14억 5700만 원 증액,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기술 TF 운영비용 등 마련을 위해 5억 8700만 원 그리고 해외안전 담당인력 지원확대 및 고위험군 국내진료 지원 등에 1억 1800만 원 증액……

27쪽입니다.

무자력자 긴급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또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콜센터 운영 내역사업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3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영사조력 및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 내역사업은 공모전의 상금을 포상금 항목으로 별도 편성하기 위해 1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28쪽 21번,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양·다자 영사외교 강화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TF 관련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1억 76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22번,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내외여권민원실 운영은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신설을 위해 3억 7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9쪽입니다.

23번,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사업 중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사업은 당초 실무 차원 회의였던 것을 확대 개최하기 위하여 7000만 원 증액. 24번,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사업은 2028년에 우리나라 개최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의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25번,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내역사업인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은 전문연구원 증원과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증원 등 총 10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여기까지 일단 하시지요.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기본적으로 저희는 증액을 해 주시면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예결위나 재정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특히 18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인도적 지원이 2개 의견인데, 700억하고 1000억이요. 2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국가별로 하는 것은 앞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의견 주십시오.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14번하고 15번,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항목은 제가 증액을 신청했지만 사실은 내년도에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증액을 요청했는데, 여당 위원님들도 기꺼이 협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여당 위원님들 반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의견 주시지요.

○조정식 위원 저도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21쪽의 연번 13번,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사업인데요. 내역사업에 보면 신기술 규범 논의 대응 강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AI, 워낙 핫이슈여서 이와 관련된 여러 의제 중에 앞으로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약 한 4억 7000 정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 열 분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어요, 여야 다 해서. 그만큼 이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고, 특히나 현재 편성된 예산은 주로 기존의 재래식 무기라든가 전통적인 군축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증액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쪽에 인도적 지원(ODA) 사업인데요. 이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인 ODA 조정에 따라서 현재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자그마치 3460억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특히나 이 관련 예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도주의 위기대응 관련된 예산이어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글로벌 국가로 나아감에 있어서, 특히 인도주의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국제적인 책임이라든가 공헌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기여를 하

는 만큼 우리 기업에, 우리 바이오·의료 기업들로 환류가 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이 부분은…… 김건 위원님께서서는 아마 1000억 정도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700억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규모가 크지만 사실은 실제 전년도에 비해서 감축된 걸 감안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향후 대응이 가능하겠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사실은 전략적으로 보면 예결위 가서도 조금 조정할 것 생각하면 이런 경우는 액수는 올리려면 좀 올려 놓는 게 전략적으로도 타당할 거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조정식 위원 그러면 저는 1000억도 동의요.

○소위원장 김영배 1000억 동의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재정 위원 저도 1000억 동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ODA 감액이라는 게 저희가 철학적 고민이나 기준을 다시 정립하기 위한 반성적 지점들이 있어 가지고 했으면 모르되, 전반적으로 너무 큰 폭의 감액이라 조금 우려스러운 바도 있습니다.

ODA가 이미 우리가 공여자로서 그저 누군가를 도와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에 걸맞는, 우리의 책임이 결국은 우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고 외교력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를 위한 일이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 규모인데 그것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런 차원에서 거듭 무상 통합을 얘기할 때 공관의 역할, 위상 강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ODA 선진화를 위해서 개발 협력 전문가 파견이라든지 17번 항목이라든지 또 기존의 ODA 사업이 분산돼 있던 것을 통합하는 가운데서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과연 이게 효율적인 선택인가에 대해서 재고해 주십사 요청하면서 제가 또 증액을 한 것이 16번 항목입니다.

여튼 제가 18번 항목은 같은 취지로 조정식 위원님과 함께했던 금액 김건 위원님이 제시하신 금액으로 동의할 수 있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안철수 위원님.

○안철수 위원 저도 사실 또 같은 의견 드리면, 일단 ODA가 결국은 우리가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누구를 도와 주겠다는 시혜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경제 규모에 걸맞게 글로벌 컨트리뷰션(contribution)을 해야지 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외교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ODA를 감축하는 나라가 많은 가운데서 그나마 거의 유일하게 ODA를 증액시키고 있어서 많은 국제기구들, 그다음에 또 빌게이츠 재단 이런 곳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한국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향이 나오는 가운데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감액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15번 키르기스스탄 사업을 보면 아까 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10억을 증액해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

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IT 투자를 할 때 이런 액수로도 할 수 있고 저런 액수로도 할 수 있거든요. 단지 기능을 몇 개 더 추가해서 액수를 대폭 증액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꼭 필요한 기능들만 추가를 해서 아주 값싸게 우리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116억 정도로 충분한 사업일 것 같은데 왜 10억을 추가해야 되는지……

혹시 김건 위원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부 측에서……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에서 혹시 아는 게 있으면 국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도 필요 예산 총액이 저희가 지금 기자재 구축 대금으로 6억 7000만 원 그리고 전문가 파견 7억 원 그리고 시스템 개발 6억 3000만 원 등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지금 키르기스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같은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최소한 수준으로 조정했었던 것을 조금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주신 예산을 감안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부안 정도로 유지를 해도 이걸 충분히 설치 가능한 부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게 키르기스스탄의 전체 사업이 116억인데 그 중에 디지털화 사업은 9억 6700으로 12억이 감액됐다는 것 아니에요, 21억에서? 그렇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12억 3300이 감액된 것을 10억, 그러니까 2억을 빼고 전년도 수준으로 좀 회복해 달라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그 끝에 감액될 때는 이게 왜 감액된 거예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감액 기조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감액을 관계 부처랑 협조하게 돼서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원래 예산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원이 확보가 되게 되면, 그러면 기자재 구축 대금이라든가 전문가 파견 등 저희가 잡혀져 있었던 금액들이 합치면 20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이게 10억 정도 추가를 해 주면 이 사업이 20억 정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9억 6700이니까 10억 3300이면 딱 20억이 되네. 그 이야기지요? 20억으로 만들어 달라 그 이야기인 거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 지금 이렇게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하고 있었던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차년도, 그러니까 27년도로 미루지 않고 26년도에 예상한 대로 집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부안 감액된 상황으로 계속 고착이 되면 내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내후년도에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리고 영사 부분에서 영사 서비스는 보니까 국정감사 가신 분들이 전부 얘기한 게 이런 재외공관의, 올려 줘야 된다 다 똑같이 얘기하셨던 것들이잖아요?

○윤후덕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영배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26페이지 20번 상단에 있는 것, 영사협력원 증원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활동비를 증액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 한 10년 전에 월 300달러로 그대로 동결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현실화시켜야겠네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18년 됐다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18년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동결된 것.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게 300달러에서 700달러로 2배 이상 올라가는 거네요. 괜찮아요, 이런 정도면?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일단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김영배 소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윤후덕 위원 캄보디아대사관에 갔더니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쪽이 감금된 신고가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 업무가 너무 많았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많이 받아서 아주 그냥 번아웃이 됐더라고요. 이런 처우라도 또 활동비라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증액하자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꼭 반영됐으면 좋겠네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건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26번부터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26번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사업은 내역사업인 미국 경제동향 대응의 과업 범위 확대를 위하여 4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미국 진출 우리 국민의 비자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하여 미국 진출 기업지원 내역사업 신설 예산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27번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세부사업 관련 7개의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신규 내내역사업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개도국 협력형 One-Stop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20억 원 증액, 내내역사업인 과학기술 거점공관 과학기술외교 사업 예산 20억 원 증액, 신규 내내역사업 신흥·첨단기술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3억 원 증액.

32쪽입니다.

신규 내내역사업 글로벌 AI 외교 플랫폼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8억 2000만 원 증액, 역시 신규 내내역사업으로 AI 외교정책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 그리고 내내역사업인 과학기술외교 전략·정책 연구용역·자문에 2억 원 증액과 내역사업인 북극 국제협력 강화에 2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다음, 33쪽 28번 재외공관 인건비는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의 해외 안전 담당 영사, 경찰직 주재관 등 총 22명 증원 인건비 29억 34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고, 29번과 30번

은 이에 따른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6억 9000만 원과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사업에서 정착지원금, 차량보험료 및 실손보험료 등 3억 51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다음, 31번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은 사건·사고 지원 행정직원 50명 증원 및 수당을 신설하기 위한 34억 4800만 원 증액, 32번 재외공관 안전강화 사업은 내역사업인 대테러 보안시설 사업에서 방탄차량 추가 구입 및 교체를 위한 20억 26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33번,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신규 부임 직원 교체여비 및 생필품 파우치 지원을 위해 5억 2600만 원 증액, 34번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재외공관 비상위성통신 장비교체 조속 실시를 위한 14억 1900만 원 증액과 대도정보안시스템 확대·구축 및 운영에서 도청탐지장비 15대 추가 구축을 위한 2억 25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36쪽입니다.

35번 외교 정보화 사업에 신규사업 제안이 2건이 있는데 외교정보자원 관리 및 안전강화 사업 120억 원과 외교정보 DB 2단계 확장 사업 1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가 외교부 증액 의견이고 41쪽에 국제교류기금 관련한 증액의견 3건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건 예, 그러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41쪽 보시면 3건의 증액의견이 있는데요.

1번 한국학 기반확대는 내역사업인 한국학강좌운영 중 KF글로벌 e-스쿨 사업 고도화 필요성에 따라 10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 2번 글로벌 인적교류 사업 중 KF글로벌챌린저 사업 확대 필요성에 따라 11억 6400만 원 증액의견과 차세대지도자교류 사업 중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를 위한 8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 42쪽 3번글로벌 협력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전략사업 중 미국 교사 교육자료 개발 및 연수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따라 2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건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장님, 저희는 기본적으로 증액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건 다음,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철수 위원님.

○안철수 위원 36페이지 35번 외교정보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할 때를 위해서 120억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자체 서버를 말합니까, 아니면 데이터센터에다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걸 말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가 저희 안에도 서버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외교부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한 카피가 더 있어야 됩니다, 화재에 대비해서.

○안철수 위원 그럼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고, 그것과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러면 다른 카피본 2개를 상시 구비한다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 지금은 하나밖에 없고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 예.

○**조정식 위원** 저는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 보면 연번 25번에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관계된 게 경제안보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통해서 경제안보 현황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대응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난번에 제3차 공급망안정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재외공관에 EWS 즉,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확충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사입장국의 협의체나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튼 세 가지 항목에서 10억 30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0쪽에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은 앞서 강선우 위원님하고 김상욱 위원님도 제기하셨던 것과 유사한 건데, 이건 주로 주미대사관의 경제과에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통상협상이나 무역 문제 또 여러 가지 비자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앞으로 대응력을 우리가 훨씬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워싱턴에 있는 자문회사들을 고용해서 이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비용이.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올라온 산출내역 가지고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좋은 자문회사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개별 건건이 할 수도 없고 때로는 필요하면 제대로 된 데를 계약 맺어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거의 1개사당 기본 한 50만 달러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 느낀 부분이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각각 4억 7300만 원 그다음에 5억 이렇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유념해서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41쪽에 KF 관련해서요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소위 말하면 K-컬처, 한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전 세계적인 한국학 수요 급증이 되고 있지만 역으로 최근 한 2년간 보면 한국학 강좌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도리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 인력을 파견해서 하는 것은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높여 가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기서 나온 대로 KF 글로벌 e-스쿨 사업과 관계해서는 10억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건** 윤후덕 위원님 말씀……

○**윤후덕 위원** 33페이지에 28번, 29번, 30번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아주반으로 캄보디아대사관을 갔다 왔지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납치·감금된 한국 사람들이 2022년에는 2건 정도였는데 2023년은 20건, 2024년에는 22건 그리고 아마 금년에는 400건이 더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재는 우리로 치면 국내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이고 대사관에서는 경찰 주재관이 하고 그것을 보조해 주시는 협력관 2명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동남아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범죄가 이제는 전화로 해서 범죄 또 PC방에 의해서 범죄 하는 다 그런 식의 사이버예요. 그러니까 범행은 외국에서 하고 피해가 생기는 것은 국내에서, 서울에서, 여의도에서—여의도 죄송합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범죄를 제대로 잡아내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범죄조직에 관여되고 있는 사람들에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거기 대사관에서 뭐라도 해결하려면 여기 얘기된 28번, 29번, 30번을 꼭 증액해 줘야 돼요.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 꼭 좀 증액해 주십시오.

○소위원장대리 김건 또 의견……

그러면 지금 잠깐 위원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금액 확정은 위원장님 온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정책질의 및 부대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자료 37쪽, 외교부 사안에 대한 기타 특이사항으로 정책질의와 부대의견이 있는데요. 정책질의는 대부분 원안 유지 관련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라 부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의 부대의견입니다.

먼저 37쪽 맨 위 쪽에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관련하여 ‘외교부는 청년 중남미 진출 사업 파견지에서 미국과 스페인을 제외하고 현지어가 가능한 학생을 선발한다’고요.

다음은 39쪽입니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관련해서 ‘외교부는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사업구조를 전면 재검토한다’라는 의견과 재외공관 인건비 및 본부 인건비 관련해서 ‘외교부는 최근 3개년 결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불용액 및 예산현액 대비 낮은 집행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 운용 계획, 직제 변경, 발령 일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입니다.

다음 40쪽,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 관련하여 ‘외교부는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내 한시조직인 국제인공지능외교과의 기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과를 상설부대의견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AI 규범·기술경쟁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국제사회 내 AI 외교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라는 의견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기여금 관련한 부대의견이 1건 있는데요, 자료 마지막 43쪽입니다.

한국학 기반확대 관련하여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에 따른 공공외교 재원 감소로 공공외교 사업의 차질이 발생하느냐, 외교부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원상복구를 유관부처와 조속히 협의한다’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건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번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의 경우에는 파견지에서 미국과 스페인을 제

외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입니다. 그런데 중남미 지역 인턴 사업으로 우리 인턴을 파견하는 미국 및 스페인 소재의 2개의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미주기구라고 OAS가 있고요 이 베로아메리카 공동체라고 해서 SEGIB이라고 두 기구가 있습니다. 이 두 기구는 중남미 지역에 소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하고 스페인에 소재하고 있지만 모든 회원 기구가 중남미 지역 국가고 또 이곳에서 중남미 지역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에 대해서 차세대 중남미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쌓을 수 있는 기구인 만큼 이런 부대의견을 철회해 주시면 어떤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하신 다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건 7번 부대의견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사업구조를 전면 재검토한다’ 이것은 이미 받아들이신 것 아닌가요, 부대의견 필요 없이?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수도권 포함한다고 저희가 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건 사업구조를 아예 바꿔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건 이 부대의견은 별도로 이미 정부 측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용을 좀 바꿔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정부에서는 이 부대의견은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한정에 위원한테도 양해를 좀 구하지.

○이재정 위원 결정하고 전화를……

○윤후덕 위원 결정하고 양해를 구하자고?

○이재정 위원 설명을 좀……

○윤후덕 위원 알았어요. 내가 양해를 구할게요, 나중에.

○외교부중남미국장 이주일 양해해 주시면 중남미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차관이 얘기했던 그 의견은 제가 오늘 아침에 한정에 의원님 방에 가서 의원님 못 뵈고 보좌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것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대리 김건 그러면 위원장대리가 부대의견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오시는 걸 좀 기다렸다가……

○조정식 위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전달해서 최종 정리하는 걸로 하지요.

○소위원장대리 김건 예. 그러면 부대의견 1번은 철회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을 모은 것으로 좀 이따 위원장 오시면 다시……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지방청년인재 관련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지……

○소위원장대리 김건 이것은 지방청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청년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구조를 바꾼다고 그런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지 아니면 어차피 반영된 사안이니까 부대의견에서……

○소위원장대리 김건 된 사안이니까 부대의견을 제외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식 위원 어떤 거요?

○소위원장대리 김건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사업구조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부대의견을 홍기원 위원께서 주셨는데요. 이미 정부에서 이것을 지방청년인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구조를 바꾸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굳이 이 부대의견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부대의견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러면 2개 남았는데, 참고로 아까 제가 오타를 잘못 읽었는데 40쪽의 ‘과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바뀌어서 외교부 관련해서 본부 예산에 2건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에 부대의견 1건, 이렇게 3건이 정리가 됐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건 그러니까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는 거지요? ‘부대의견’은 잘못 들 어간 오타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소위원장대리 김건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이걸 제가 낸 건데요 이것에 대한 외교부 의견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냈던 취지는 일단 국가AI전략위원회가 11월 중에 AI 액션플랜을 발표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외교부가 이와 관련된 다수 이행과제 부처들의 주무 부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기존에는 국제인공지능외교과가 한시 조직으로 1년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앞으로 상설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제기를 한 거거든요. 물론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려면 이것도 부처 간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아무튼 외교부가 이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또 우리 외통위에서 이렇게 부대의견을 정리하면 그것을 뒷받침 받아서 좀 더 세게 해 보시라고 부대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건 그리고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면 여기에 국제기구 분담금 증액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 국제기구 분담금……

국제기구국장 나와 계십니까? 이것은 원래 외교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할 때는 있던 건

데 다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것 아니고도 여기서 증액 의견이 들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이 가운데?

○외교부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저희들이 이후에 증액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증액 요청드린 것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것 반영해서 증액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건 그러면 위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원래 외교부에서 기재부에 신청했다가 삭감된 항목들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한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외교부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저희 국제기구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 중에서 일단 UNHCR에 납부하는 사업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조정식 위원 쪽을 얘기해 주세요.

○외교부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예, 19페이지 연번 10번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UNHCR에 납부하고 있는 사업분담금인데요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 109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을 좀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집행한다는 전반적인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서 감액이 됐는데 UNHCR이 5대 유엔 중점협력기구고 또 저희 고위직 진출 기반 등을 위해서 조금은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번에 1억 8000만 원 증액으로 그렇게 또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유엔인권사무소(OHCHR)에 대한 예산도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지금 한국인 전문가분들이 인권협약기구의 위원들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필요성도 있고 해서 증액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5억 원 증액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건 간사, 김영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세 번째로 20페이지 맨 밑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3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기여를 좀 해 왔고 또 지금 인도적인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는 지원을 계속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0억 원 정도 증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 바로 위에 있는 것은 이야기하셨어요, 글로벌 보건기여?

○외교부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글로벌 보건기여는 저희 국이 아니라 아마 개발국에서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글로벌 보건기여는 원래 질병퇴치기금이 없어지면서 새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여기 지금 글로벌 보건기여로 증액을 요청해 주신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워낙에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글로벌 보건기구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았는데 인도적 지원 예산이 3400억 정도 감액이 되면서 감액된 부분을 감안해서 원래 당초에 글로벌 보건기여 예산으로 일반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들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과거보다는

조금 더 줄어든 상태의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이렇게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요—그래서 저희로서는 증액해 주시면 이 예산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기업들도 진출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아까 뒤에 ODA 700억·300억 있었던 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24쪽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분야에 GAVI랑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GAVI하고 이것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양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이것을 하나는 700억으로 하고 하나는 300억으로 하면 1000억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다 300억 주고 뒤에다 700억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1000억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중동 같은 경우는 아까 김건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키르기스스탄도 그렇고 중앙아시아하고 중동은 우리가 앞으로 자원협력 문제나 아니면 방산협력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것은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김건 위원 키르기스스탄은 안철수 위원님께서 필요가 없다고 말씀……

○소위원장 김영배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감안이 가능할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안철수 위원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지 없는 것을 만드는 건지에 따라서 다르지요, 예산이.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내년에 집행을 하려면 좀 줘야 내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안철수 위원 이게 현재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는 데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건지, 어떤 쪽입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어떤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저희 예산을 보시면 키르기스스탄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이 840만 불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27년까지 걸쳐서 840만 불에 해당되고 그 안의 내역사업들도 전부 다 상대 국가하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예산이 이렇게 9억 원대로 감액이 되게 되면 어차피 그다음 해로 넘겨서 이 사업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당국하고 협의 과정 중에서 최소한의 예산만 잡혀서 감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증액을 20억 원으로 해 주시면 원래 저희가 계획했었던 26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27년도에는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문인식을 통한 본회의장 디지털 투표 시스템이 이미 있는데 그걸 업그레이드 내지는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아예 그런 것

이 없는데 새롭게 만드는 사업인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제가 알기로는 새롭게 만드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 예?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신규로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 신규로 하면 오히려 부족할 것 같은데.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전체 사업 규모가 840만 불이라 약 100억이 좀 넘는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20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840만 불, 대략 120억 정도, 한 11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안철수 위원 그런데 그 전체가 다 지문인식을 통한 디지털 투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KOICA, 내용 아세요? 이게 100억이 넘는 거면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디지털화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국회와 관련되어서 20억이다 그 말인 것 아니에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총 840만 불입니다. 이 중에서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지문인식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교육도 있습니다, 방한 연수. 이런 걸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830만 불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총 20억을 받아야 되는 필요정은 뭐냐 하면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도 지문인식을 통한 본회의장 디지털 투표를 내년부터는 의무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을 맞춰 주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총 20억 원이 투입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사업 첫 년도입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저희가 23부터 시작해서요 내년도에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해 주고 27년도에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다.....

○안철수 위원 예를 들면 대한민국국회도 이런 시스템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얼굴도 다 알고 명패라든지 그런 걸로 충분히, 정말 대규모 군중이 아니라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지문인식 시스템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이걸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방한 때 저희 국회의장한테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양 정부 부처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제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키르기스스탄 그 문제가 있고 나머지 중에 좀 조정해야 될 게 어떤 어떤 게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일단 증액 의견 먼저 말씀드리면 12쪽에 제주포럼 관련해서 4억 2700만 원, 5억 원 규모 결정 또는 아까 반대 의견도 나오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2번 이걸 어떻게?

○윤후덕 위원 2번이요?

○소위원장 김영배 예.

○윤후덕 위원 제주포럼 이것 얘기하는 거지요? 이걸 간사님 의견대로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4억 2700만 원 증액으로……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다음 쪽 13쪽에 세 분의 반대 의견이 나왔었고요 4번은 서남아 파트너십 확대에 27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규모가 달라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한중 학술 교류, 저는 이것은 조금 강화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 데.

○안철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걸 민간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으니 민간에서 하는 역할은 민간에서 하게 하고 이 정도 정부안이면 충분히 정부 일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3억 원 증액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안철수 위원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이걸 3억 원 증액 안 하는 걸로 하지요.

○김건 위원 예, 안 하는 걸로 하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안 하는 걸로 하고.

4번은 서남아시아를 얼마나 증액할 거냐지요. 사실 우리가 소다자주의 하는 데는 위원님들이 많이 한 것, 1억 8000으로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위에는 같고요 큰 차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2700이나 3000이나 그게 그거지.

많은 위원들이 하신 걸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2700만 원으로.

그다음에 15쪽 6번 대러 전략외교 강화 사업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구요. 6500만 원 증액 여부 확정 필요합니다.

○김건 위원 이 사업은 내년도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많이 상황이 바뀔 것 같아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시면 어떨까……

○소위원장 김영배 필요하다고 보이지요? 6번은 그렇게 하고요.

7번.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문제없습니다.

8번 한·아프리카 재단 출연에서 우선순위 감안한 금액 조정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대로 다 할지 아니면 조금 규모를……

○소위원장 김영배 우선순위로 얘기한 게 인건비, 경상운영비 그다음에 협의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협의체랑 지역 연구 활성화까지.

○소위원장 김영배 연구 활성화 거기까지만 일단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러면 그렇게 4건만 반영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리고 18쪽, 9번 기타 의무부담금 납부 관련해서 미납 방지 관련한 데 대한 반대 의견, 증액……

○소위원장 김영배 이것은 맞는 말씀 같아요. 그건 안 해도 다음에 필요하다면 하면 될 것 같고.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러면 1건 더 빼는 걸로……

○소위원장 김영배 예, 그 이외의 부담금 납부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담금 납부는 어차피 뒤에 건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10번에 있는 300억 이것은 300억으로, 그렇지요? 하고, 뒤에는 700억 반영하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300억. 그리고 18번에 700억으로 했고요. 25쪽, 19번에 전부 증액 의견이신데 증액 규모 전년도 수준의 예산편성인데 127억, 128억, 154억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것은 논의해 주신 분들이…… 저는 아까 들질 못해서.

○김건 위원 이 문제는 논의가 없어서……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다른 논의는 없었는데 소위 위원님들 중에 각각의 안을 내신 분들이……

○안철수 위원 여기 다 계시네요.

○김건 위원 세 사람 있으니까 중간 값으로 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시지요. 그러면 윤후덕 위원님 안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128억 22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사업은 정리가 다 됐는데요. 아까 감액 및 증액 의견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8쪽에 중남미지역 국가 교류 사업 관련해서 심포지엄은 1억 원을 삭감하되 비목 변경해서 8000만 원 다시 올리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그 밑에 연구원 추가 고용을 위해서 증액 의견이 2억 9900만 원이나 3억 8000만 원이나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몇 번이요?

○조정식 위원 아까 중남미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3번에 첫 번째 심포지엄은 1억 편성돼 있는 것을 8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00만 원 삭감하는 거고요. 그런데 약간 비목 조정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증액에는 다 동의하시는데 증액 규모가 달라서 2억 9900이나 3억 8000이나.

○김건 위원 이것 조정식 위원님 안으로 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시지요. 여기 계신 분 안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에서 지방청년 부분은 설계를 조정하는 걸로 해결이 됐는데 온라인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1억 원을 감액할 것이냐 5억 원을 증액할 것이냐가 충돌이 되고 나머지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7억 원 전액 감액에 대해서도 공통된 의견이 안 나

와서 1억 원 감액, 7억 원 감액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플랫폼을 만들어야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플랫폼이 없는데 공공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그러니까 이것은 구축은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7억을 들여서 구축을 해야 됩니까? 2억이면 안 돼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7억 원은 플랫폼 구축이 아니라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1억이나 2억이나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프로젝트 지원까지.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지, 플랫폼을 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억 원에서 1억을 깎아서 1억만 남길 거냐 5억을 증액해서 7억으로 만들어 줄 거냐 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7억씩이나 들어요?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양해해 주시면, 공공문화외교국장입니다.

저희가 2억으로 정부예산을 했는데 사실 이게 과거에 이런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할 때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이 저희가 과거 사례나 이번 세팅을 봤을 때 내년도에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야 다른 사업들도 원활히 되는데 그것이 한 7억 정도 드는 걸로 저희가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실제로 7억 원이 든다?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예, 내년도 안으로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7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은 이왕 해 주려면 7억 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다른 사업비를 좀 줄이더라도.

○김건 위원 그런데 저희는 감액 의견을 낸 상황이라서……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지요.

○김건 위원 증액 의견만 채택되는 것은 조금……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2억을 1억으로 깎자는 게 아예 사업을 없앨 것 아니면……

○김건 위원 아니, 감액 의견은 제가 철회하겠는데요. 7억으로 증액하는 것은……

○조정식 위원 7억 증액은 어디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10페이지 맨 아래쪽에 5억 원 증액하면 최종 7억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돈이 만약에 그러면 김기현 위원님이 공연을 15억을 증액한다고 돼 있으니까 밑에 있는 5억을 해 주되, 이걸 조금 조정해서 조금 줄여서 하든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것하고 조금조금씩 잘라 가지고 5억을 맞추든가. 시스템 구축은 하려면 제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른 돈을 좀 줄이더라도?

○안철수 위원 그런데 방식이 클라우드를 쓸 수도 있거든요.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이니까 클라우드가 사실 훨씬 더 편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버에다가 여러 가지 갖다 붙이면 하드웨어 비용이 또 많이 듭니다. 아마 그 차이일 겁니다.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테크니컬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김기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15억 원 증

액 사업은 외교부 공공문화외교 강화 사업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의견을 보훈부 사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직제상 보훈 사업 관련된 예산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것은 아까 얘기 안 했으면서……그러면 이걸 삭감하는 대신에 시스템을 해 주되 그런데 안철수 위원님 말씀이 기술적으로 이게 7억까지 안 들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안철수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배 이것을 그러면 한 3억……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과거에 외교부에서 공공외교 종합시스템, 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그것을 저희가 확대·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당시에 그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도 저희가 첫 연도에 7억 정도가 소요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 여타 문화 관련된, 공공외교에 관련된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에 보통 7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런데 내용을 사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아마 외교부에서 했던 건 클로즈드 시스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에게 안 되게 하려면 보안이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다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국민 참여형으로 하게 되면 그런 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일반 클라우드로 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일반인들이 다 접속 가능하고 하니까 그만큼 비용은 줄어들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 공공용으로 개발했던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특별한 이야기 없으면 정부안 2억 원으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액은 없고.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감액 없고 증액도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사업 공모형 사업 7억 원 전액 감액에 대해서는 아까 반대의견……

○소위원장 김영배 그 뒤에 증액의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7억 원을 깎아 버리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해 줘야 되니까 이 사업비도 줘야 되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그럼 정부안대로 2억 원이 남는 거고요. 그다음에 별도 사업으로 공공외교 프로젝트 공모하는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이 7억 원이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걸 전액 감액하자는……

○소위원장 김영배 흠피가 생기고 하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시스템을 해 주면 당연히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럼 감액은 안 하시는 걸로……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이 감액을 안 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거지요.

○안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기존의 우수사례 공모 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굉장히 중복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사업을 몰아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게 관리 포인트도 적게 들고 훨씬 더 지식들, 날리지 베이스(knowledge base)도 많이 쌓일 수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아까 정부 쪽에서 설명하기를 기존 사업은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한 성공 사례 공모고 지금 신규로 편성된 거는 앞으로 내가 이런 사업을……

○**안철수 위원** 예, 아까 따로 설명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러면 이거는 그냥 유지하는 걸로……

○**소위원장 김영배** 예,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마지막 1건……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이거 플랫폼 구축은 2억 원 그냥 그대로 두는 거고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플랫폼은 증액도 감액도 하지 않고 정부안대로……

○**소위원장 김영배** 인요한 위원이 제기한 거는 감액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둔다는 거고 김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증액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건 위원** 아니요. 이거는 아까 보훈부로……

○**안철수 위원** 이거는 저쪽으로 넘기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보훈부로.

○**안철수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러면 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에 위원님께서 청년인턴 채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5억 원 감액의견이 있었는데 별도 토론 사항이 없었고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없으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한정에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감액을 할까요? 어쨌까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이게 취지와 목적에 안 맞다는 지적이 국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게 목적이었는데 지자체에 서울시청이나 울산광역시청 이렇게 채용된 사례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감액하는 걸로.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자체는 채용을 안 할 예정입니다,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12억 중에 5억을 감액하자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채용을 안 하면.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아마 지자체는 채용 안 하고 국정 참여할 수 있는 데로 채용지를 변경하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게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러니까 예산을 안 깎으면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것도 그러면 그냥 두는 걸로 하시지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그래도 있는데.

○**조정식 위원** 지자체가 안 하는데 이것까지 없어지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요, 지방에 안 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일단 수석전문이 한번 정리를 쭉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외교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해서 먼저 예산안은 유럽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 700만 원 감액 등 1개 사업의 감액이 있고요. 증액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5400만 원 등 총 39개 사업에 대한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셨습니다. 국제교류기금 관련해서는 한국학 기반 확대 사업 10억 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증액과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셨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소위 자료에 있는 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이상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 3건을 채택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외교부·재외동포청·민주평통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 보고와 관련된 자구 수정과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차관님, 마지막 마치기 전에 뭐 하나 이야기하실 게 있다고 그랬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장님, 감사 말씀 드리려고, 마무리 말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게 아니고……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냥 마무리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요? 추가로 뭐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더니 아닌가? 아니면 됐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강선우 김 건 김기웅 김상욱 김영배 김태호 안철수 윤후덕 이재정 이춘석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조정기획관 문인석

북미국장 홍지표
중남미국장 이주일
유럽국장 임형태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개발협력국장 박종한
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선영
외교전략기획국장 이성환
한국국제협력단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획협력이사 우경하
한·아프리카재단
상근이사 감운안
재외동포청
차장 변철환
기획조정관 오진희
교류협력국장 김민철
재외동포협력센터
경영기획실장 이미경

입시회의록